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책학 석사 학위논문

공적소득보장 수급이 한국
중·고령층의 소비패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패널연구

2019 년 8 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전공

조 영 섭

공적소득보장 수급이 한국
중·고령층의 소비패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패널연구

지도교수 권 혁 주

이 논문을 정책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 년 3 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 전공
조 영 섭

조영섭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 년 6 월

위 원 장 구 민 교 (인)

부위원장 김 봉 환 (인)

위 원 권 혁 주 (인)

국문초록

본 연구는 중·고령층가구를 대상으로 노령가구와 준노령가구의 소비 특성을 비교하고 공적소득보장수급액이 중·고령가구의 구체적인 욕구와 복지수준을 반영하는 소비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노령가구의 소비빈곤을 완화할 효과적인 맞춤형 복지정책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의 5차부터 12차 년도의 자료를 바탕으로 2016년 기준 가구주 연령이 만 65세 이상부터 만 71세 이하인 가구를 노령가구주 가구로 설정하고, 가구주의 연령이 만 55세 이상부터 만 61세 이하인 가구를 준노령가구주 가구로 설정하였다. 이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소비항목 지출비중에 대해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해 5개 소비패턴으로 나누고, 소비패턴에 대한 소비빈곤여부, 공적소득보장제도수급액 및 기타요인들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이항로지스틱 패널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준노령가구주 가구와 대조적으로 노령가구주 가구가 소득 및 소비 빈곤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기초연금과 기타정부보조급여 등 공적이전제도의 수혜를 받는 비율 역시 증가했다. 반면 노령가구주 가구의 근로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가구주의 만성질환보유비율과 여성비율은 준노령가구주 가구보다 노령가구주가가 더 높았다. 중·고령층의 소비패턴을 분석한 결과 주거비 중심형, 관계비 중심형, 의료비 중심형, 식비 중심형, 교통비 중심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주거비 중심형이 소득빈곤율, 취업여부 등 여러 경제적 지표에서 가장 취약성을 보였으며, 의료비 중심형과 식비 중심형이 뒤를 이었다. 관계비 중심형과 교통비 중심형은 소득과 소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주거비 중심형은 독거 비율이 50%를 상회하였고, 가구주의 여성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사회보험수급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지만 기초생활보장 및 기타정부보조 수급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의료비 중심형은 사회보험 수급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비패턴의 영향요인에 대한 패널 분석의 결과로는 소비빈곤 여부가 중·고령층의 소비패턴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빈곤지위와 소비패턴의 연관성이 확인되었다. 반면 공적이전 수혜, 특히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의 소득보장 정책이 소비패턴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 정책이 노년층의 구체적인 필요와 욕구에 크게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통해 만 65세 이상의 노년층이 동년 시기의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서 더욱 경제적으로 취약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현행 공적소득보장으로는 노인에게 대한 빈곤완화에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한편, 노년층의 소비패턴 분석을 통해 상대적으로 빈곤한 계층이 주거비, 의료비, 식비등 기본적인 생활과 관련된 지출이 많다는 특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종합해볼 때, 현재 노년층의 빈곤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등의 소득보장 정책의 확대보다는 주거비 지출이 높은 빈곤 노년층에 대한 주택 지원, 의료지원의 확대 등과 같은 개별 소비패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종단적인 분석을 통해 준노령가구와 대비되는 노령가구의 소비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점차 성숙해가는 한국의 공적소득보장제도를 포함한 공적이전이 갖는 가구의 개별적인 욕구충족 정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연구대상인 한국복지패널이 저소득층 대상으로 과표집된 점에서 전체적인 노인인구

에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으며, 개별 공적이전 정책에 대한 효과를 세부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노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등과 같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별 필요 맞춤형 정책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주요어 : 중·고령층, 소비빈곤, 소비패턴, 공적소득보장제도,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한국복지패널

학 번 : 2017-23334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3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5
제 1 절 이론적 논의	5
1. 빈곤의 정의	5
2. 빈곤의 측정	6
3. 노년층의 소비특성 및 소비지출패턴	9
제 2 절 노인 빈곤과 공적소득보장제도	10
1. 한국 노인 빈곤의 현황과 특성	10
2. 노년층 대상 주요 공적소득보장제도	11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16
1. 한국사회의 빈곤 측정 연구	16
2. 노년층의 소비지출에 관한 연구	21
3. 공적소득보장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26
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32
제 1 절 연구가설 및 변수설정	32
1. 연구가설	32
2. 변수의 설정	34
제 2 절 분석모형의 구성	39
1. 분석자료	39
2. 분석대상	39
3. 분석방법	40

4. 분석모형	42
제 4 장 분석결과	43
제 1 절 기술통계분석	43
1. 분석 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43
2. 준노령가구주 가구와 노령가구주 가구의 비교	45
제 2 절 소비패턴 군집분석 결과	53
1. 분석 대상 가구의 소비패턴	53
제 3 절 패널 로지스틱 분석 결과	60
1. 소비빈곤에 대한 공적이전소득 수급액의 영향력 분석	60
2. 소비패턴 별 영향요인 분석	61
제 5 장 결론	67
제 1 절 연구 결과 종합	67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정책제언과 한계	68
참고문헌	71
Abstract	79

표 목 차

[표 1] 한국사회의 빈곤 측정에 관한 연구	20
[표 2] 노년층의 소비지출에 관한 연구	25
[표 3] 공적소득보장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30
[표 4] 소비지출항목비중 구성 및 측정	35
[표 5] 독립변수 및 영향요인 변수 구성 및 측정	38
[표 6] 분석 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분포 및 빈도(%) ...	47
[표 7] 준노령가구주 및 노령가구주 가구의 일반적 특성 비율 비교 (%)	50
[표 8] K-평균 군집분석에 의한 유형화 결과 및 비중(%) ...	53
[표 9] 군집유형별 평균 소비지출액 및 비중	55
[표 10] 군집유형별 영향요인 특성 비율(%) / 금액(만 원) ..	58
[표 11] 소비빈곤 영향요인 분석	61
[표 12] 주거비·의료비·관계비 중심형 영향요인 분석	65
[표 13] 식비·교통비 중심형 영향요인 분석	66

그 립 목 차

[그림 1] 분석모형	41
-------------------	----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기대수명의 증가와 출산율의 하락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로서 각국 정부는 이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개인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은 주로 출산율의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고령화에 대해 일반인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대부분 향후 한국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시킬 수 있는 문제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데(최성재, 2014), 이 때문에 인구 고령화의 저지에 정책적 초점이 맞춰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부담의 증가 및 출산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인구피라미드는 30~5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아리 형태를 보이지만, 2060년에는 60세 이상 인구의 부분이 두터운 역삼각형 형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¹⁾ 이처럼 이미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2019년 현재 인구의 14.9%가 만 65세 이상인 고령인구인 점을 고려할 때²⁾, 인구 고령화에 대처하는 방향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를 지연시키는 정책 이외에도, 고령인구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 바로 빈곤노인인구의 증가 문제다. OECD는 상대적 빈곤 개념을 적용하여 빈곤율을 국가의 가처분 가구소득 중위값의 50% 이하인 인구의 비율로 정

1) 통계청. 2017. 2017 고령자 통계.

2) 통계청. KOSIS 100대 지표. http://kosis.kr/conts/nsportalStats/nsportalStats_0102Body.jsp?menuId=10&NUM=1014 (검색일: 2019.05.08.)

의한다. 이 기준에 따른 한국의 2015년 현재 6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45.7%로 OECD국가 중 압도적인 1위에 위치하고 있다(OECD, 2017: 135). 이처럼 한국의 노인빈곤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노년층 빈곤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기초연금을 필두로 한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14년부터 시행되어 대표적인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로 자리 잡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기준 하위 70%를 대상으로 매월 최대 2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존 연구결과들은 기초연금이 노년층에 대한 기초적인 삶의 질 보장의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적이라고 분석하였다. 하지만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현행 기초연금 수급기준 대상자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정액지급을 하는 방식 하에서는 낮은 급여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낮은 급여수준을 유지한다 해도 향후 노인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국가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가해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결국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재정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노인빈곤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보조가 필요한 빈곤노인집단을 세부적으로 구별하여 단계별 혹은 맞춤형 정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노년층의 빈곤에 대해 좀 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소득뿐만 아니라 소비 기준을 통해 빈곤을 측정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가구의 소비패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어느 가구나 개인의 생활수준에 대해 자원과 역량의 측면인 소득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소비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Ringen, 1988). 노년빈곤층 내에서도 상이한 소득과 소비패턴을 보이는 집단 별로 지원이 필요한 특정 소비항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맞춤형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직접적으로 노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려면 노년층의 소비 특성에 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비노년층 중에서도 향후 10년 안에 노년층에 접어들 만 55~65세의 소비빈곤에 대한 연구도 같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해당 집단은 베이비붐 세대의 범주에 포함되는데, 한

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보통 1955년생부터 1963년생을 의미하며(김지훈·강길선, 2017: 610; 박서영·홍송이, 2017: 349; 이지영·김도성, 2015: 380),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경제적인 비중 역시 높다. 이 베이비붐 세대가 2010년을 기점으로 정년퇴직을 하고, 노년층에 접어들면서 향후 10년 안에 노인 인구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 결국 베이비붐 세대는 본 연구에서 노년층과의 비교집단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노년층으로서 유의미한 분석대상이 된다.

한편, 기존 노년층의 소비특성 및 패턴에 관한 연구들은 횡단적인 연구가 주를 이루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양상의 변화는 추적하지 못하였다. 또한 비노년층이 노년층으로 진입하면서 소비패턴의 특성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지 않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되고, 기초노령연금이 2014년 기초연금으로 개편되며 한국의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통시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과연 노인의 소비빈곤과 소비패턴에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따라서 본 연구는 중·고령층이 어떠한 소비지출패턴을 보이는지 유형화하며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 등의 영향요인이 어떤 양상을 나타내는지 종단 분석할 것이다.

분석 대상 자료는 한국복지패널조사의 5차부터 12차 자료(2010년 ~ 2017년 수집)이며, 우선 중·고령층의 소비패턴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군집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수행한다. 그 이후 분석대상자료의 범위인 8년 동안 준노령 가구에서 노령 가구로 진입한 집단과 준노령가구의 지위를 유지한 집단의 공적소득보장제도 수급이 소비빈곤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패널회귀분석을 진행하며, 마지막으로 소비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소득보장제도 수급, 빈곤여부, 인구사회학적, 경제관련, 건강관련 요인들에 대해 역시 패널회귀분석을 수행한다.

위 분석을 통해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가 노령 가구의 전반적인 소비 빈곤여부 및 구체적인 소비생활에 어떤 영향을 보이는지 확인하며, 공적 소득보장제도가 노인의 지출양상을 고려하여 발전해야 한다는 기존 연구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통시적인 관점에서도 유효한지 확인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소득 빈곤에 대한 대응책인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와 차별화되는 가구의 소비패턴을 고려한 정책에 대해 제안할 것이다.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이론적 논의

1. 빈곤의 정의

빈곤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적인 정의는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 혹은 그러한 욕구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김교성 외, 2008: 299)라고 할 수 있다. 빈곤은 모든 사회에 보편적으로 항상 존재하는 사회문제였지만 반대로 상이한 사회적 맥락 하에서 빈곤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다양한 빈곤의 정의가 혼재되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김교성 외, 2008: 299; 문진영, 2015: 210; 신복기 외, 2016: 63; Ringen, 1988: 352). 빈곤에 대한 다양한 개념은 일반적으로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 등으로 구분된다(김교성 외, 2008: 300; 신복기 외, 2016: 63-65; 조성한, 2002: 159).

절대적 빈곤은 측정가능한 절대적 기준으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수준을 설정하여 해당 기준에 미달하는 상태를 빈곤이라고 정의하는 것이다(조성한, 2002: 160; Dandekar, 1981). 이는 빈곤에 대한 개념이 정의되기 시작한 초창기에 제기되었는데, Booth(1899)와 Rowntree(1901)의 연구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김교성 외, 2008: 30). 절대적 빈곤은 사회가 갖는 다양한 시간적, 공간적 맥락뿐만 아니라 한 사회 안에서도 빈곤의 기준이 다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Iceland, 2005).

상대적 빈곤은 이러한 절대적 빈곤 개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Peter Townsend가 주장한 개념으로서, 빈곤의 기준을 어떤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으로 설정함으로써 각 사회별로 상이한 맥락에 적용 가능한 개념이다(조성한, 1963: 160; Townsend, 1962). 상대적 빈곤은 주변의

생활수준과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 박탈과 불평등 개념을 고려하여 다양한 사회의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정의의 자의성이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임채홍 외, 2011: 82).

빈곤에 관해 가장 최근에 등장한 개념인 주관적 빈곤은 사회적 맥락에 대한 고려에 더해 개인의 주관적인 빈곤에 대한 인식을 통해 빈곤을 정의한다. 개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은 개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상대적 박탈감 또한 주관적인 감정이라는 측면에서 주관적 빈곤은 빈곤에 대한 가장 이상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신복기 외, 2016: 64-65; 조성한, 2002: 164). 하지만 주관적 빈곤 정의는 지나치게 자의적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적용되기에는 지나치게 객관성이 결여된다는 한계가 있다(김교성 외, 2008: 300; World bank, 2002).

2. 빈곤의 측정

앞에서 언급한 빈곤의 정의에 따라 빈곤의 측정방식이 달라진다. 이때 어느 개인이나 가구의 빈곤여부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빈곤의 기준선이다.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곤선은 최저임금제와 함께 중요한 사회적 기준의 기능을 수행하였다(문진영, 2015: 212). 한국에서도 사회보장기본법(제10조)에서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정부가 매년 공표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빈곤의 측정 방식과 기준선에 대한 정의도 빈곤의 정의에 따라 변화하였다.

절대적 빈곤 개념에 의한 빈곤측정 방식은 소비를 기준으로 수행되며, ‘전물량방식’, ‘반물량방식’ 등이 있다. 전물량방식은 Rowntree의 연구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생활에 필수적인 모든 품목에 대한 지출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이며, 반물량방식은 보다 간편한 측정을 위해 Mollie Orshansky에 의해 고안된 방법으로 최저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식료품 비용을 산출한 뒤, 사회의 평균소득에서 식료품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의 역수를 곱한 결과를 빈곤의 기준선으로 설정하였다(김교성 외, 2008: 301; 조성한, 2002: 162). 절대적 빈곤선은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일반적인 가치관을 반영한 개념으로서 빈곤은 개인의 노력 부족이나 불가피한 운명의 결과로 인식되었으며, 빈곤의 기준도 매우 엄격하였다(조성한, 2002: 160-161). 절대적 빈곤선은 절대적 빈곤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전문가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사회적 맥락의 고려 없이 빈곤이 일괄적으로 규정된다는 한계점을 드러낸다(조성한, 2002: 161; Townsend, 1962).

상대적 빈곤 개념을 적용한 상대적 빈곤선은 중위소득이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사회의 개별적 특성을 포함하는 측정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중위소득의 40~60%내외의 소득 비율이 상대적 빈곤선으로 규정된다(김교성 외, 2008: 301).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빈곤을 측정도 상대적 빈곤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상대적 빈곤선은 사회의 개별적인 맥락을 포함하면서도 이해와 적용이 쉽다는 장점을 갖는다(조성한, 2002: 163; National Reserch Council, 1995). 하지만 사회의 전체적인 생활수준의 변동으로 인한 빈곤 인구의 증감이 빈곤율에 반영되지 않는 등 빈곤의 절대적 수준에 대한 측정은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문진영, 2015: 222). 또한 측정자의 자의성에 의해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빈곤정도를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조성한, 2002: 164).

주관적 빈곤 개념을 바탕으로 한 빈곤측정은 개인에게 직접 빈곤의 인식을 묻는 방법을 사용한다. 주관적 빈곤의 측정 방식은 라이덴방식과 델릭방식, 깰럽방식 등이 있다. 라이덴 방식은 개인이 평가한 최저생계비와 실제 소득이 교차하는 접점을 회귀분석으로 도출하여 이를 빈곤선으로 설정하는 방식이다(문진영, 2015: 224). 델릭방식은 개인이 응답한 최소생계비와 실제 소득이 일치하는 가구들의 평균소득을 빈곤선으로 설정하는 방식이며 깰럽방식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비용을 묻는 질문에 응답한 금액의 평균을 빈곤선으로 설정하는 방식이다(김교성 외, 2008: 301-302). 주관적 빈곤선은 측정자의 자의성을 어느 정도 배제할 수 있지만 설문 문항이 최저생계비를 얼마나 잘 표현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으며, 모든 응답자가 최저생계비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통용되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한다(김교성 외, 2008: 302; 조성한, 2002: 164). 따라서 정책적으로 사용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한편 빈곤의 측정은 자료 수집과 측정의 용이성으로 인해 주로 소득에 기초한다(김교성 외, 2008: 302). 하지만 노동소득이 없는 가구 등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대상이 존재하는 문제가 있으며, 생활수준의 유지에 있어 소득은 간접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한다(김교성 외, 2008: 302; Ringen, 1988). Selsnick(2001)은 소득을 기준으로 측정된 빈곤율 수치가 소비를 기준으로 측정한 수치에 비해 과대 측정되며, 경제적 복지수준의 측정에 소비가 소득보다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가구의 소득이 필요한 소비량보다 많을 때는 저축을 하고, 반대로 소득이 적을 때는 저축액의 지출이나 대출 등을 통해 필요한 소비수준까지 지출하려고 하여 소득보다는 소비량이 가구의 욕구와 실제 경제적 복지를 직접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이다(Selsnick, 2001). 또한 소득은 일시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일반적으로 은퇴 이후 소득의 급격한 감소를 겪는 고령층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경제상태를 나타내는데 소득보다 총소비지출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여운경, 2003: 2). 이에 따라 소득 기준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소비인데, 경제학적 용어로서 소비는 욕구의 충족을 위해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고 소모함을 의미한다. 소비는 개인의 욕구가 반영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요인, 집단간 모방의 과정도 포함하는 복합적인 양상을 띤다(백학영, 2010). 또한 경제적 소비의 증가는 복지증가로 이어진다(Jackson & Marks, 1999). 이러한 측면에서 소비를 통한 빈곤의 측정은 상대적인 빈곤에 대한 직접적인 측정이 가능하다.

특히 Ringen(1988)은 빈곤에 관한 연구의 주류가 빈곤에 대한 정의와 그 측정 방식이 부조화를 이뤄 논리적인 연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였다. 빈곤에 대해 소득기준을 통해 정의하는 연구뿐만 아니라 빈곤에 대한 정의를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소비로 규정해 가시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에서도 주로 사용하는 측정 방식은 간접적인 방식인 소득수준 측

정방법이라는 것이다. Ringen은 소비가 직접적으로 생활수준을 반영하지만, 소득수준 측정의 대안으로서의 소비를 통한 빈곤 측정 방법은 합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낮은 수준의 소득이 항상 낮은 수준의 지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하며 빈곤에 대한 직접적 정의와 논리적으로 부합하는 지출 측면에서의 빈곤 측정방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3. 노년층의 소비특성 및 소비지출패턴

가계의 소비는 소비항목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또한 소비항목들은 서로 결합되어 패턴을 이룬다(Hoyt, 1938; 김진훈·고보선, 2016: 480에서 재인용). 소비지출패턴은 “상호연관된 소비항목들이 내재적으로 구조화되는 방식(정영숙, 2000: 87)”으로 정의할 수 있다. 소비항목간의 연관관계에 대한 예를 들면 어떤 소비항목의 지출이 증가하면 다른 소비항목의 지출이 감소하는 대체재의 경우나 어떤 소비항목 지출의 증가가 다른 소비항목의 지출 역시 증가시키는 보완재의 경우 등이 있다(성영애, 2013: 159). 이러한 소비패턴은 가구 구성원들의 필요와 욕구 및 가구의 경제구조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조동필·양세정, 2004). 그렇기 때문에 가구 총 소비지출액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가구별로 상이한 수요와 욕구를 가구의 소비지출패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노인 가구의 소비지출패턴은 비노인가구와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공통된 결론에 도달하였다(성영애·양세정, 1997; 이지영·김도성, 2015). 이는 우선 소비 특성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근로계층의 경우 소비의 소득 의존성이 높아 소득과 소비가 매우 유사한 양상을 띠다고 할 수 있지만 노년층은 생애자산의 보유로 인해 소비의 소득의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도 있다(Meyer & Sullivan, 2007). 또한 노인은 건강이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이질적인 특성을 갖는다(정영숙, 2000). 같은 맥락에

서 여러 연구들은 노년층의 소비지출 형태와 비노년층의 소비지출 형태가 차이를 보인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특히 주거비, 의료비 등 노년층의 특정 소비항목의 경우 유소년층이나 청장년층에 비해 현저하게 소비액 비중이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노인가구의 소비패턴에 대해 기존 연구들은 인구구성학적 변수 이외에도 빈곤지위와 가구유형의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백학영, 2010; 김진훈, 2016). 또한 노년층은 생애주기에 따라 자녀의 분가, 배우자와의 사별 등으로 인한 가족형태의 변화나 건강상태의 변화, 실업으로 인한 경제상태의 변화, 경기변동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변화에 직면한다(정영숙, 2000).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비노인가구주가구가 노인가구주가구로 진입하면서 소비지출패턴이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를 분석하면 비노인가구주가구와 대비하여 노인가구주가구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의 욕구가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다양한 공적소득보장제도가 노인가구주가구의 개별적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노인 빈곤과 공적소득보장제도

1. 한국 노인 빈곤의 현황과 특성

앞서 언급하였듯이 상대적 소득 빈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국 노년층의 빈곤율은 OECD 최고수준이다. 또한 전체 인구와 노년층의 빈곤율 차이 역시 약 31.9%p로 OECD 평균인 1%p를 훨씬 넘어서며 해당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OECD, 2017: 135).³⁾ 이처럼 타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한국의 노년층의 빈곤율이 세계 노년층의 빈곤율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는 이유를 단순히 은퇴 등으로 인한 근로소

3) 한국 전체 인구 상대적 빈곤율: 13.7% / 66세 이상 노년층 상대적 빈곤율 45.7%

득의 감소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한국의 노년층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인한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미성숙함 등이 거론되고 있다(이상봉, 2018: 80). 2015년에서 2020년까지의 출생자를 기준으로 한국의 기대수명은 여자 85.4세, 남자 79.3세로 OECD 평균인 여자 83.4세, 남자 78.3세를 각각 상회한다(OECD, 2017: 121). 이와 같은 평균수명의 연장은 은퇴이후 생애의 연장으로 이어지며 빈곤 문제를 심화시킨다. 이에 더해 재취업의 어려움, 공적 노인소득보장 정책의 미흡 등은 고령층의 빈곤문제를 심화시킨다(배성우 외, 2008: 293). 특히 미성숙한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로 인한 낮은 공적이전소득 역시 한국 노년층의 높은 빈곤율 수치에 기여하고 있다. OECD에 의하면, 2015년을 기준으로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에서 공적이전이 차지하는 비율의 OECD 평균은 58.0%이며, 한국은 3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멕시코, 터키, 칠레, 이스라엘에 이어 35개 OECD 국가 중 최소수치 5위에 해당하는 것이다(OECD, 2017: 133). 이렇게 한국에서 노인의 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연금제도의 성숙도가 낮기 때문에 실질소득대체율이 선진국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이를 보완할 정부의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및 기타 복지제도의 지출 역시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임완섭, 2015: 96-97). 이외에도 노년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빈곤에 빠진 가구가 빈곤에서 벗어나기 힘들며, 배우자와의 사별 및 가구원의 독립 등으로 인해 단독가구의 비율이 증가하는데, 이들은 높은 빈곤율을 보인다(배성우 외, 2008: 293). 또한 여성노인의 빈곤율이 남성노인의 빈곤율보다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었다(배성우 외, 2008; 신복기 외, 2016).

2. 노년층 대상 주요 공적소득보장제도

1) 공적소득보장제도 현황 및 정의

2018년도 보건복지예산에 포함된 주요 복지 정책은 기초생활급여, 기

초연금, 장애인연금,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등이 있다(윤석명, 2018: 40). 이 중 생계·의료·주거급여를 포함하는 기초생활 급여와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층이 주요 수혜 대상인 대표적인 공적소득 보장제도다. 여기서 공적소득보장이란 질병, 노령, 장애 등 사회적 위험에 의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지출이 급격히 증가한 경우, 이러한 변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소득의 형태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태성·김진수, 2013). 한국의 경우 초기 공적소득보장제도는 절대적 빈곤선인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지급되었지만, 기초노령연금의 도입과 기초생활보장의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개편을 통해 상대적 소득 빈곤선으로 수급기준을 정하고 있다.

2)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 중 노령에 초점을 맞추어 고령층에게 소득을 보장해주는 공적노후소득보장에 해당한다. 기초연금의 목적은 노인에게 일정한 소득을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다(신화연, 2017: 44).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공적노후소득보장은 1991년에 시행된 ‘노령수당’이다. 노령수당은 70세 이상의 노인보호시설, 복지시설에서 생활하거나 생활보호대상자인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1994년 기준 월 15,000원의 급여를 지급한 정책이었다(윤찬영, 1996). 1997년부터는 연령하한선을 65세로 낮추었지만, 모든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보편성이 낮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을 보완하여 1998년 노령수당은 경로연금으로 개편되어 시행되었다. 경로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1998년 도입 당시 만 65세 이상이었던 차상위저소득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차상위저소득자는 본인과 배우자,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상대적 빈곤선 미달 여부로 선정되었다(정경희 외, 2007). 월급여액과 수급률이 증가하긴 하였지만, 선정기준의 합리성, 급여수준의 적절성, 중복수급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또한 예산상의 문제로 2007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 비율이 14% 미만으로 저하되었다(정경희 외, 2007).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급률을 높여 제도의 보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이 2007년 국민연금 2차 개혁 당시에 도입되었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되었다. 급여액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연금 수급 이전 3년 동안의 평균소득월액(A값)의 5%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과 가구구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책정되었다. 한편, 기초노령연금 역시 낮은 급여수준으로 인해 노인빈곤 퇴치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강성호·최옥금, 2010; 김재진 외, 2014; 김재호·정주연, 2012; 장현주, 2013).

2014년 7월에 도입된 기초연금은 이러한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문제제기에 더해,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노인빈곤 이슈를 제기하며 기초연금을 공약으로 제기하면서 탄력을 받아 시행되었다(이용하·김원섭, 2013; 장현주, 2015). 수급대상기준은 기존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한 상대소득기준(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을 유지했다. 다만 급여액에서 큰 변화가 있었는데, 우선 급여액의 기준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의 5%에서 10%로 인상하여 지급수준이 이전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급여액과 국민연금수급액을 연동하여 기초연금 대상자 중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노인에게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을 감액하되, 최소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의 5%를 지급하도록 하였다(이채정·권혁주, 2016: 367).

한편, 기초연금 지급액이 최대 약 20만 원 이었던 201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약 463만 명이었고 기초연금 지출액은 약 10조 원이었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증가 및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2030년 기초연금 총 예상 지출액이 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신화연, 2017: 50-51). 이처럼 기초연금에 대해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예상되면서도 여전히 노인빈곤율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키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3)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급여는 2000년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공공부조 성격의 공적소득보장 제도로 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장제·해산급여 등 7가지 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연금이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고령자에 대한 공적소득보장이라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공적소득보장이다.

이 중 노인빈곤층과 특히 관련이 있는 급여는 생계·주거·의료 급여이다.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되며, 의료급여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뉘어 진찰·검사·약제·치료·예방·입원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 받는다⁴⁾. 주거급여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임차급여와 수리비를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로 나뉘어 각각 기준임대료와 수선유지급여 기준에 의한 액수가 지급 된다.⁵⁾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3년 개편 이후 소득인정액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가구 혹은 특별한 경우 개별 가구원에 대해 보장된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소득관련 수급기준이 소득과 재산 기준이 통합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지의 여부로 설정되었다(김진식 외, 2016: 216). 이후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면서 수급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원수 별로 정해진 기준 중위소득으로 대체되었다.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은 관계부처와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있다(김성욱·장동열, 2018: 267-268). 이와 동시에 통합급여체계에서 개별급여체계로 전환되어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네 개 급여의 수급기준이 각각 분리되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알아보기.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2&ccfNo=3&cciNo=2&cnpClsNo=3> (검색일: 2019.05.08.).

5)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알아보기.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2&ccfNo=3&cciNo=2&cnpClsNo=2> (검색일: 2019.05.08.).

40%,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3%(2019년 44%로 변경),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로 설정되었다⁶⁾.

한편 수급기준 중 자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현행 소득인정액 방식과 cut-off방식이 존재한다. 소득인정액 방식은 자산을 주거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등으로 설정하여 각 자산의 가치를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자산이 수급기준과 급여수준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김성욱·장동열, 2018: 273, 278). cut-off 방식은 자산기준과 소득기준을 별도로 두어 자산수준이 급여수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 소득인정액 방식은 유동성이 낮은 저량(stock)인 자산을 유량(flow)인 소득과 하나의 척도로 통합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한편 cut-off 방식은 소득이 낮은 빈곤층 중에서도 별도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가구가 수급대상이 되므로, 자산기준 수치를 높게 설정하면 실제 빈곤층이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반대로 자산기준을 너무 낮게 설정하면 빈곤하지 않은 가구도 수급대상이 될 수 있는 등 적정선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김성욱·장동열, 2018: 273-275).

부양의무자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충족된다(보건복지부, 2017).

6) 보건복지부. 2019. 보건복지부,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발표!.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47381 (검색일: 2019.05.08.).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1. 한국사회의 빈곤 측정 연구

한국의 빈곤양상과 특성, 빈곤에 대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는 공적소득보장제도의 빈곤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는 과정의 첫 단계로, 공적소득보장제도 이외에 고령층 가구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를 확인하는데 의의가 있다. 한국사회의 빈곤 특성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는 소득척도의 빈곤에 대한 연구와 다양한 차원의 빈곤에 관한 연구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본 연구의 대상이며 빈곤취약계층인 노년층의 빈곤에 관한 연구를 별도로 확인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전반적으로 한국사회의 절대적 빈곤은 전반적으로 경제발전 과정에서 크게 줄었지만, 1997년 경제위기와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상대빈곤 문제는 상존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가구주의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가구주 내 취업자 수가 작을수록 빈곤에 취약한 특성을 보이는 결과를 도출하였다(김교성 외, 2008; 김교성, 2010; 김기승·조용수, 2007; 박상우·김성환 2007; 이순아 2015; 임채홍 외, 2011).

1) 한국사회의 빈곤양상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김기승과 조용수(2007)는 한국노동패널데이터 3차 년도부터 7차 년도까지의 자료를 통해 세대별로 상대빈곤에 대한 진입·탈출요인의 차이를 로짓(logit)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연령대일수록, 빈곤진입율은 높고, 빈곤탈출률 낮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학력, 가구 내 취업자 수, 취업전환 여부 등이 주요 빈곤탈출의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60대 가구주 가구의 경우 가구 내 취업자 수, 학력, 지역, 취업상태, 취업전환여부 등의 변수들이 빈곤진입과 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우와 김성환(2007)은 한국노동패널데이터 1~6차 년도 자료를 통해

1995년부터 2002년까지의 빈곤율의 변화를 분석하면서, 3차 년도와 4차 년도 자료를 대상으로 빈곤층의 특성과 빈곤의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했다. 그 결과 가구주의 성별, 연령, 학력수준이 빈곤진입 및 탈출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빈곤여부에 취업여부보다 취업의 질, 다시 말해 근로소득의 증대가 중요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순아(2015)는 가계동향조사의 1990년~2011년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사회 가구빈곤의 결정요인을 미시와 거시수준으로 나누어 위계적일반화 선형모형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미시수준 요인으로는 가구주의 성별, 학력, 취업상태, 가구유형 등 개인 및 가구 단위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거시수준 요인으로는 한국사회의 경제와 분배, 노동시장 상황과 인구구조 등과 관련된 지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로 미시적 수준에서는 빈곤층에서 개인 및 가구의 취약한 특성이 나타났음이 드러났다. 거시적 수준에서는 한국의 상대빈곤이 심화되었으며, 그 영향요인으로 경제성장의 둔화, 소득불평등의 심화, 노동시장 상황의 악화 등이 배경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의 지역적 격차를 분석한 연구로는 임채홍 외(2011)의 연구 등이 있다. 임채홍 외(2011)는 한국복지패널의 1차~3차 년도 중 3개년 동안 동일하게 조사된 가구와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절대적, 상대적 빈곤수준의 결정요인과 그 격차를 다중회귀 패널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독립변수는 지역구분으로 수도권 여부와 연도가 설정되었으며, 통제변수로 성별, 연령, 학력, 혼인상태, 가구구성, 경제활동상태 등이 사용되었다. 종속변수는 절대적 빈곤수준과 상대적 빈곤수준을 구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절대적 빈곤수준과 상대적 빈곤수준이 지역과 연도별로 상이한 변화패턴을 보였으며, 절대적 빈곤수준은 지역요인에 큰 영향을 받았으나 상대적 빈곤수준은 지역요인 이외에 개인 및 가구특성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았음이 드러났다.

위 연구들은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빈곤의 특성과 그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한국사회에서 가구주 성별,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등의 요인이 빈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빈곤의 영향요인 분석에 대해 정책적 변수가 고려되지 않았으며, 위 연구들 대부분이 횡단면적 분석에 그쳐 시간의 변화를 고려한 심도 있는 분석을 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2) 다양한 차원의 빈곤에 관한 연구

한편 기존 소득기준의 빈곤 척도뿐만 아니라 소비지출기준, 상대적 박탈 기준 등 다양한 빈곤척도를 분석한 연구도 일부 존재하였다. 김교성 외(2008)는 한국복지패널데이터 1차년도 자료를 통해 한국사회의 절대적 빈곤, 상대적 소득 빈곤, 상대적 소비 빈곤, 주관적 빈곤, 상대적 박탈 등의 양상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또한 가구주의 특성을 성별, 연령, 교육수준, 고용형태, 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영향요인이 다양한 빈곤 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각 빈곤기준에 따른 빈곤율이 최대 25.6%에서 최소 13.9%로 차이가 있음이 드러나 다양한 빈곤기준 정의와 상호보완의 필요성을 드러냈다.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빈곤율은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측정한 상대적 빈곤율이며,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한 빈곤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구주 특성 측면에서는 여성, 노인, 저학력, 실업, 군 단위 거주자의 특성을 가진 가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빈곤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교성(2010)은 서울복지패널 1차년도 자료를 통해 서울지역의 소득 및 소비에 기초한 상대적 빈곤에 대한 영향요인을 개인과 지역 수준의 변수로 나누어 위계적 일반화 선형분석을 통해 연구하였다. 그 분석 결과 소득의 상대적 빈곤율은 약 16%로, 소비의 상대적 빈곤율은 약 11.3%로 나타났다. 한편 가구 빈곤의 영향변수로는 연령, 학력, 이혼·별거·사별 경험여부, 근로여부, 주거형태 등의 변수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적 특성 중에서는 총 사업체 수와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 수 등의 변수가 가구의 빈곤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차원의 빈곤에 관한 위 연구들은 개별적으로 측정되는 다양한 빈곤 척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다양한 빈곤 척도를 동일한 자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그 결과 모든 척도에 대해

빈곤층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척도의 상호 보완적 사용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3) 노년층의 빈곤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노년층의 빈곤에 관한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변수, 노동력·직업력 관련 변수, 사적이전 및 공적이전 소득 등 다양한 변수의 설명력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배성우 외(2008)는 한국노동패널데이터의 4차 년도와 8차 년도 자료를 통해 빈곤노인가구의 빈곤탈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해 분석하였다. 영향요인으로는 인구사회학적 변수, 노동관련 변수, 소득원 변수 등이 분석되었다. 분석 방법은 빈곤지속가구와 빈곤탈피가구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과 t-test 등이 사용되었으며 변수의 영향력 분석을 위해 로지스틱 분석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인구사회학적 변수에서는 교육수준이, 노동관련 변수에서는 근로소득의 증감이, 소득원 변수에서는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 소득과 사적이전 소득이 빈곤탈피집단에 속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연구는 노인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빈곤 진입과 탈출의 측면을 모두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개별 공적이전소득 정책의 영향력에 대해 분석하지는 못했다는 한계를 보인다. 또한 2개년도의 자료를 통해서만 빈곤의 진입 및 탈출 여부를 조사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신복기·이성진(2016)은 부산과 경남지역의 61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은퇴이후 주관적 빈곤 발생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생존분석법의 생명표법분석과 콕스 확률 위험분석이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은퇴 이후 1년 내에 경제적 빈곤이 발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빈곤 발생에 대한 영향요인으로는 성별, 가구구성, 학력, 취업여부, 은퇴 이전 직장의 직종, 국민연금수급여부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연구는 공적이전을 직역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세분화하여 분석하여 각 제도의 효과

성을 비교하였지만,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관적 빈곤만을 측정하였기에 연구결과의 객관성이 떨어지고 일반화를 시키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상봉(2018)은 중·고령자의 소득빈곤현황과 그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국민노후보장패널의 1차 년도부터 5차 년도까지의 자료였으며, 이를 통해 만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시장소득, 경상소득, 총소득에 대한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의 추세를 확인하였다. 또한 시장소득과 경상소득에 영향을 주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을 패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모든 종류의 소득상대빈곤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이 나타났다. 패널분석 결과로는 성별, 연령, 교육기간, 가구구성, 주거점유형태, 거주지역이 시장소득과 경상소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연구는 만 50세 이상인 준노령 인구를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종단적인 분석을 하였다는 의의가 있지만, 소득 측면에 집중하여 소비지출을 간과하였으며, 개별 공적이전 소득의 영향력을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인다.

한국사회의 빈곤 측정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초기에는 소득 측면에서의 절대적·상대적 빈곤의 영향요인 분석에 그쳤다가 점차 소비지출과 같이 다양한 측면의 빈곤을 분석하며, 빈곤에 대한 영향요인을 개인·가구 특성 등 미시적 요인과 지역·사회경제적 측면 등 거시적 요인을 아울러 분석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연구가 횡단면적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지역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등 개별 공적이전소득 정책의 영향력을 세부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를 보인다.

<표 1> 한국사회의 빈곤 측정에 관한 연구

연구자	연구대상	결과
김기승·조용수 (2007)	빈곤 진입 및 탈출요인	연령대, 학력, 가구 내 취업자 수, 취업전환여부, 배우자 여부가 빈곤탈출에 영향을 미침

연구자	연구대상	결과
박상우·김성환 (2007)	빈곤의 결정요인	가구주 성별, 연령, 학력수준이 빈곤진입 및 탈출에 영향을 미침
이순아(2015)	가구빈곤의 결정요인	미시 수준에서는 개인·가구의 취약특성이, 거시 수준에서는 경제성장·소득불평등· 노동시장 상황이 가구빈곤에 영향을 미침
임채홍 외(2011)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빈곤 결정요인	절대적 빈곤수준은 거주지역에 영향을 받으나, 상대적 빈곤수준은 개인 및 가구특성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음
김교성 외(2008)	소득·소비· 주관적 빈곤 및 상대적 박탈	연령, 학력, 이혼·별거·사별 경험여부, 근로여부와 총 사업체 수·소규모 사업체 근로자 수 등 지역적 특성이 가구의 빈곤가능성에 영향을 미침
김교성(2010)	소득·소비의 상대적 빈곤	연령, 학력, 이혼·별거·사별 경험여부, 근로여부, 주거형태 및 지역의 총 사업체 수·소규모 사업체 근로자 수 등이 빈곤에 영향을 미침
배성우 외(2008)	노인가구의 빈곤탈피	교육수준, 근로소득 증감, 금융소득·부동산소득·사회보험소득· 사적이전 소득이 빈곤탈피에 영향을 미침
신복기·이성진 (2016)	부산·경남지역 주관적 빈곤	성별, 가구구성, 학력, 취업여부, 은퇴 전 직종, 국민연금 수급여부 등이 빈곤여부에 영향을 미침
이상봉(2018)	중·고령자의 소득빈곤 결정요인	조사기간동안 중·고령자의 소득상대빈곤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성별, 연령, 교육기간, 가구구성, 주거점유형태, 거주지역이 중·고령자의 시장소득과 경상소득에 영향을 미침

2. 노년층의 소비지출에 관한 연구

1) 노년층의 소비지출 및 패턴에 관한 연구

최근 노년층의 소비지출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노년층의 소비지출 및 패턴에 대한 연구와 노년층과 비노년층의 소비지출을

비교한 연구로 나누어볼 수 있다. 백학영(2010)은 빈곤지위와 가구유형을 노인가구의 소비특성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자료로는 한국복지패널조사 3차 년도가 활용되었다. 빈곤지위는 상대빈곤 개념을 이용하여 OECD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한 후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하였다. 노인가구는 가구주가 만 65세 이상인 가구로 정의하였고, 노인가구의 유형은 독거가구, 부부가구, 기타가구로 구분하였다. 이 구분을 통해 노인가구와 노인빈곤가구의 각 소비항목별 지출비중과 소득탄력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각 소비지출 항목이 총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영향을 기준으로 소비패턴을 구분하여 의료 지출형, 여가 지출형, 교육 지출형, 주거 지출형, 관계 지출형, 식비 지출형으로 나누었다. 연구의 결과로 노인가구의 소비성향은 빈곤지위, 가구유형, 소비패턴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빈곤지위와 가구유형에 따라 노인가구의 총소비지출과 항목별 지출비중에 차이가 도출되었으며, 빈곤가구의 소비가 비빈곤가구에 비해 더 소득탄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빈곤지위와 가구유형이 소비패턴의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연구는 노인가구의 소비특성과 빈곤지위의 관계성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으나 역시 횡단적 분석에 그쳤으며 소비 빈곤 측면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보인다.

최옥금(2011)은 국민노후보장패널 5차 자료(2009년 조사)를 분석하여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소비지출패턴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지출의 구분은 국민노후보장패널의 구분을 따랐으며, 전체 소비지출에 대한 각 소비항목의 비중, 전체 소득에 대한 각 소득항목의 비중을 조사하였다. 독립변수들은 성별, 연령, 교육년수, 취업유무, 질환유무 등으로 이루어진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가구유형, 주택 점유형태, 거주지역, 빈곤, 순자산으로 이루어진 가구특성 요인으로 구분해 측정하였다. 소비패턴의 도출방법은 k-평균 군집분석이 사용되었으며, 영향요인분석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방법이 사용되었다. 분석결과로 노인 빈곤가구와 비빈곤가구의 소득과 지출 구성을 비교하였으며, 노인가구의 소비지출 패턴을 의료지출중심, 주거지출중심, 기본생활중심, 관계지출 중

심으로 구분하였다. 각 패턴별로 영향요인은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패턴 별 특성 및 영향요인 차이를 통해 주거지출중심형과 의료지출중심형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대안 모색을 주장하였다. 위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소비패턴에 대해 자산과 부채 등의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과 노령연금 수급여부와 소비지출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분석에 그쳤다는 한계를 갖는다.

김진훈(2016)은 소비항목 중 저축비와 문화비에 주목하여, 고령자 1인 가구와 고령자부부가족의 소비특성과 소비패턴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위 연구에서 고령자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규정한 만 55세를 이상 인구로 설정되었다. 또한 고령화연구패널자료 4차년도를 대상으로 한 군집분석을 통해 보건의료 중심형, 저축 중심형, 생계 중심형, 식비 중심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소비패턴에 대한 결정요인분석을 위해 이항로지스틱 분석을 사용했다. 연구결과 소비패턴의 결정요인으로는 가구유형이 모든 소비패턴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외에도 연령, 학력, 가계 총 소득, 취업여부, 주택소유여부, 거주지역, 주관적 건강상태 등이 주요 영향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위 연구는 공적연금의 수혜자 및 미리 노후를 대비하여 빈곤상태에 있지 않은 노령층에 대해 새롭게 조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정책적 변수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으며, 횡단적 분석에 그쳤다는 한계를 보인다.

정운영과 정세은(2010)은 65세 이상 노인가계 중 소득분위 하위 25%의 저소득가계와 상위 25% 고소득가계로 나누어 양 집단의 소비지출구조의 특성과 결정요인을 비교하였다. 분석자료로는 국민노후보장패널의 2차 년도 자료(2007년)가 사용되었다. 독립변수로는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가구주 교육년수, 경제활동상태, 주택소유형태, 거주지역, 월소득, 총 금융자산, 총부동산자산 등이 사용되었다. 종속변수로는 총지출액, 총소비지출액과 각 소비지출 비목별 소비지출액, 비소비지출액과 각 비소비지출액이 측정되었다. t 검정과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고소득가계와 저소득가계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위에서 언급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소비지출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간 총 지출액, 소비지출액, 식료품비 등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저소득가계의 경우에 대해서는 소득이 소비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이미 가구의 소비가 소득수준을 상회하여 소비지출액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소득이 증가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 논문은 기존 연구와 대비하여 노인가구 내에서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가구를 비교하여 저소득가구에서의 소비와 소득의 괴리가 나타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대출이자상환, 생활보조금, 세금,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구조의 영향력을 분석한 차이를 보인다.

2) 노년층과 비노년층의 소비패턴 비교 연구

노인과 비노인가구를 구분하여 소비지출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로는 성영애와 양세정(1997)이 있다. 성영애와 양세정(1997)은 만 60세를 기준으로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를 구분하여 양자의 소비지출규모와 패턴을 비교하였다. 또한 노인가계의 어떤 특성이 소비지출규모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로는 통계청이 1994년 실시한 도시가계조사가 사용되었다. 독립변수로는 가계소득, 가족 수, 교육수준, 가구주연령, 가구주성별, 자가소유여부, 직업 등이 구성되었다. 연구결과로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는 총 소비지출액수와 교통·통신비지출, 교육·교양오락비, 피복·신발비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소비지출에 대한 설명력 측면에서 노인가구가 비노인가구보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큰 소비지출의 차이를 보였다.

베이비붐 세대 가계와 노인가계를 비교한 연구로서 이지영과 김도성(2015)은 2013년도 가계동향조사자료를 분석하여 소비항목 및 소비지출 패턴 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t 검정과 비계층적 군집분석, 교차분석과 분산분석이 사용되었다. 그 결과 지출액 측면에서 보건의료비, 지출비중 측면에서 주류·담배와 오락·문화 비목을 제외한 모든 비목에서 베이비붐 세대 가계와 노인가계의 유의한 차이가 도출되었다. 소비지출패턴에 대해서는 베이비붐 세대 가계의 경우 약 60%가 균형지출

형으로 분류되었고, 교육비지출 중심형과 교통비지출 중심형은 베이비붐 세대에만, 식료품지출 중심형과 보건의료비지출 중심형은 노인가계에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각 지출패턴의 가계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 두 세대 모두 주거비지출 중심형에 속한 가계의 인구사회학적 및 경제적 특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년층의 소비지출 및 소비패턴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노년층이 식비, 주거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 지출비중이 크며, 의료비 중심형 및 주거비 중심형에 대한 빈곤의 취약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빈곤층의 경우 소비와 소득간의 괴리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노년빈곤층의 실질적인 복지상태를 분석하려면 소득 보다는 소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역시 공통적으로 정책적 변수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종단적 분석은 미흡하였다.

<표 2> 노년층의 소비지출에 관한 연구

연구자	연구대상	결과
백학영(2010)	노인가구 소비특성	상대적 소득 빈곤여부와 가구유형이 노인 가구의 소비성향, 항목별 지출비중, 소비패턴에 영향을 미침
최옥금(2011)	노인가구 소비패턴	의료지출 중심, 주거지출 중심, 기본생활 중심, 관계지출 중심으로 소비패턴 유형화
김진훈(2016)	노인가구 소비패턴	혼인여부, 가계소득, 연령, 주택소유, 주관적 건강상태 등이 노인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소비패턴에 영향을 미침
정운영·정세은(2010)	저소득·고소득 노인가구 소비지출구조	저소득과 고소득 집단 간 총 지출액, 소비지출액, 식료품비 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저소득가계의 소득은 소비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
성영애·양세정(1997)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 소비지출규모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는 총 소비지출액, 교통·통신비, 교육·교양오락비, 피복·신발비 지출에서 차이를 보임. 노인가구의 소비지출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큰 영향을 받음

연구자	연구대상	결과
이지영·김도성 (2015)	베이비붐 세대·노인가계 의 소비패턴	베이비붐 세대와 노인가계는 대부분의 지출비목 비중에 차이를 보임. 주거비 지출 중심형이 경제적으로 열악함.

3. 공적소득보장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공적소득보장제도 중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성 대한 연구는 크게 소득(빈곤)에 미치는 영향,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소비(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장현주(2010)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 빈곤층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빈곤감소 효과를 사적이전과 비교하여 측정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3차 년도의 자료를 사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일반수급가구를 대상으로 빈곤감소 효과성과 빈곤감소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이 논문은 빈곤감소 효과성을 가구의 절대빈곤율 및 빈곤갭의 감소 정도를 측정한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빈곤감소 효율성으로는 전체 수급액 대비 빈곤가구에 지급된 수급액을 측정하는 Weisbrod가 제시한 수직적 효율성 및 빈곤가구에 지급된 수급액 중 해당 가구의 빈곤갭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한 수급액을 측정하는 Beckerman의 분석방법이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빈곤감소 효과성 측면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의 빈곤율 감소 효과와 빈곤 갭 감소효과가 사적이전에 비해 크며, 1인 가구에서 특히 그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빈곤감소 효율성 측면에서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소득이전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기초생활보장급여의 Beckerman 효율성이 사적이전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이 논문은 정확한 자산조사나 최저생계비의 조정, 부정수급에 대한 주기적인 확인 등을 통해 공적이전의 사각지대 감소를 주장하였으며 다인가구에 대한 고려가 더욱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본 연구는 기초생활보장과 사적이전의 빈곤감소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단년도 조사에 그쳐 정책의 장기적인

효과를 도출하지는 않았고, 가구원 수 외에 여타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김환준(2017)은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모든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빈곤완화효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측정하였다. 이 논문은 시장소득에 사회보장급여를 포함한 총소득과 시장소득에 대해 각각의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정도인 빈곤갭을 비교하여 빈곤완화효과성을 측정하였다. 또한 총 사회보장급여에 대비하여, 이미 시장소득만으로 최저생계비를 넘은 가구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액과 사회보장급여의 추가로 최저생계비를 넘은 가구에 대한 최저생계비 초과분을 뺀 빈곤갭 감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액수를 비교하여 빈곤완화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이 논문은 이러한 방법으로 한국복지패널 2차 년도부터 11차 년도 데이터를 종합하여 공적연금, 산재·고용보험, 기초생활보장, 장애수당, 기초연금, 보육지원과 기타 사회보장급여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각각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효과성과 효율성 면을 동시에 고려하였을 때, 공적연금,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의 빈곤완화정도가 크게 나타났으며 10년간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다. 다만 2006년과 2015년을 비교하였을 때,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의 효율성은 감소하였다는 점이 드러났다. 분석 결과를 통해 이 연구는 특히 급여액의 인상과 소득기준 강화를 하지 않으면서도 사회보장제도의 빈곤완화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초연금제도의 수급기준을 강구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는 각 사회보장급여의 빈곤완화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비교하였으며, 10년간의 빈곤완화정도를 측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장현주(2010)의 연구와 같이 빈곤선을 절대적 수치인 최저생계비로 산정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분석한 빈곤의 정의 자체에 대한 논의의 여지가 있으며, 종단적 분석을 하였지만 각 개별가구에 미친 사회보장급여의 영향의 통시적 변화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정화와 문상호(2014)는 기초연금이 노인의 소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기초연금의 도입에 즈음하여 실제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인 한국복지패널의 7차 및 8차 자료를 바탕으로 8차

자료 조사대상 연도 당시 만 65세 이상인 노인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의 효과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성향점수 매칭을 통해 표본을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처치집단에 기초연금이 부여된 상황을 가상적으로 시뮬레이션 하여 이중차이 및 삼중차이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대상 변수로는 노인 개인의 성별, 연령과 가구의 특성, 소득 및 지출변수,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이 선정되었다. 이중차이 분석결과 기초연금 수급 가구가 미수급 가구에 비해 월 9.67만원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소득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삼중차이분석의 결과로는 연령이 높은 노인일수록 기초연금의 수급으로 인한 소득증대효과가 크며,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가구의 지출이 높은 가구일수록 기초연금의 효과가 컸다. 이를 통해 이 논문은 노인가구의 주요 지출항목에 대해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등 노인가구의 총 소득 및 소비와 연관된 노후소득보장 정책을 강구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보장 비수급집단에 한해 기초연금의 소득증대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노후소득보장 정책 간 중복수급이 정책의 효과성을 떨어뜨릴 우려를 제기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노후소득보장제도 간의 영향을 측정한 의의가 있으나,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실제 급여를 받지 않은 가구가 급여를 받았다고 가정해 경상소득과 기초연금 급여액을 단순 합산하였으므로 소득보장급여가 가구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보인다.

김정훈(2018)은 기초연금을 포함한 각종 노인복지서비스 경험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한국복지패널의 4차 년도부터 11차 년도를 활용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교육서비스, 소득 및 일자리 관련 서비스, 요양 및 돌봄관련 서비스, 보호서비스, 급식서비스 등의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경험이 5개 부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패널 서열형 프로빗 모형 추정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각 부문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들이 도출되었는데, 사회교육, 일자리, 방문봉사, 의료비지원 등의 서비스가 노인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

의미했다. 반면 기초연금, 물품지원, 가정봉사, 식사배달 등의 서비스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특히 기초연금에 대해 연금 급여의 수준 및 연금 운영상의 한계를 지적하였으며, 정책에 대한 정치적 논란과 수급자의 혼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사회교육 및 일자리사업의 제도적 확대와 가족친화적 사회복지제도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장기적으로 노인의 삶에 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복지서비스의 객관적인 효과성을 판단하기에는 분석모형의 설명력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이채정과 권혁주(2016)는 소비가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직접적인 지표라고 강조하며, 노인의 생활비 지출에 대한 기초연금의 효과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8차 년도와 10차 년도 자료를 통해 기초연금 대상집단과 비대상집단에 대한 이중차이모형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인구학적 요인과 의료적 요인,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여부, 근로여부 등을 통제변수로 하여 집단별 세부소비항목의 지출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유의미하게 증가한 소비항목은 교통통신비 지출이 유일했으며, 이중차이 회귀분석 결과 기초연금 수급은 교양오락비의 지출을 증가시킬 확률이 높음이 나타났다. 다만 전반적으로는 기초연금의 지급이 노인들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 연구는 기초연금 도입 초기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정책의 장기적인 효과성을 판단하기에는 정책 시행 기간이 충분치 않았으며, 각 소비항목의 지출비중이 아닌 지출액만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노인 지출구조의 전반적인 변화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한계점이 있다.

<표 3> 공적소득보장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연구자	연구대상	결과
장현주(2010)	기초생활보장의 소득빈곤감소	기초생활급여의 빈곤감소 효과성은 높으나 빈곤감소 효율성이 사적이전보다 떨어짐
김환준(2017)	사회보장급여의 빈곤완화정도	공적연금,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의 빈곤완화 효과성은 높으나 빈곤완화 효율성은 점차 감소함
이정화·문상호(2014)	기초연금의 소득증대효과	연령, 가구 소득수준, 가구 지출에 따라 기초연금의 소득증대 효과가 영향을 받음
김정훈(2018)	노인복지서비스의 삶의 만족도 증대효과	사회교육·일자리·방문봉사·의료비 지원 등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기초연금·물품지원·가정봉사·식사배달 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
이채정·권혁주(2016)	기초연금의 소비증대효과	기초연금 수급은 교양오락비 지출을 증가시키나 전반적인 생활수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빈곤의 정의 및 측정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빈곤양상과 영향요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노인빈곤의 특성에 관한 연구도 다수 존재하였다. 또한 노인의 소비패턴과 그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도 다수 진행되었으며, 노인과 비노인 가계의 비교연구도 소수 있었다. 특히 소득과 소비가 소비패턴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가구주 연령, 성별, 교육정도, 취업여부, 거주지역, 가구유형 등 빈곤과 소비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거지출 중심형 및 의료지출 중심형 등 특정 소비패턴을 가진 노년층에 대해 지출특성을 고려하는 세심한 정책적 대안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단년도 자료 혹은 2개 년도의 비교연구로 진행되어 노인가계의 소비패턴 및 영향요인에 대한 종단적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또한 일부 존재하는 패널 분석 등의 종단적 연구는 다양한 노후소득보장정책에 대해 개별적인 영향력을 분석하지 않았다. 한편 기초연금 등의 공적소득보장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소득, 삶의 질, 소비 등 다양한 정책효과성의 기

준에 대해 분석하였지만 구체적 소비지출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았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종단면적 분석도 미흡하였다. 종단면적 연구의 부재는 단순히 비노인가계와 노인가계의 비교가 아닌 비노인가계가 노인가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의 소비패턴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널 분석을 통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준노령층이 노령층으로 진입하는 가구들에 대해 공적소득보장제도 등 다양한 요인의 소비패턴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등 다양한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성숙되어가면서 노년층의 지출패턴에 유의미한 변화를 주었는지 결과를 도출하고, 이에 맞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가설 및 변수설정

1. 연구가설

노인빈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는 한편,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예상되는 복지정책 재정의 비대화가 예상되는 한국의 현재 상황에서, 노인빈곤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노인빈곤의 양상을 확인하고,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노인빈곤층의 특성과 개별적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단 년도 혹은 2개 년도의 자료를 조사하였기 때문에 분석결과가 매우 단편적이며 외생변수의 통제가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시간의 경과를 고려한 소비패턴의 변화 및 그 영향요인의 양상을 확인할 수 없다.

한편, 주된 노년층 대상 공적이전제도인 기초(노령)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같은 상대적 소득기준에 따른 일률적 소득보장 제도는 모두 도입된 지 20년 가까이 경과하였으며 수급기준 및 지급액수에 대한 개편과정을 거침으로써 점차 정착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책들이 노인의 구체적 욕구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통시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노인빈곤에 대한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와 공적이전 제도의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한 기존연구들은 주로 소득기준의 상대적 빈곤 혹은 빈곤갭 등의 지표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위 정책들의 빈곤층의 구체적 욕구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지 않았으며, 정책의 성숙을 고려한 통시적인 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구의 직접적인 생활수준정도는 소비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가구소득은 이러한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지표이다(김교성

외, 2008: 302; Ringen, 1988; Selsnick, 2001). 특히 노년층의 경우 은퇴 이후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는 대신 생애자산을 보유하여 소비의 소득의 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성을 보인다(여윤경, 2003: 2; Meyer & Sullivan, 2007). 또한 총소비지출액에서 드러나지 않는 가구별 개별적인 욕구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소비지출패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이승신 외, 1996).

따라서 본 연구는 사전적으로 공적이전제도가 가구의 전반적인 욕구 충족 정도를 반영하는 소비빈곤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며, 더 나아가 노후소득보장정책과 기타 맞춤형 공적이전제도가 가구의 구체적 욕구를 반영하는 소비패턴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패널연구를 통해 종단적인 검증을 거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다수의 대상자를 향한 일률적 소득보장정책에서 개별 소비자의 지출수요에 대한 맞춤형 정책으로의 확장이 필요한지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다른 연령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노인가구 소비패턴의 고유한 특성을 밝히고,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소비패턴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을 제기한 기존 연구들도 존재한다. 본 연구 역시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군집분석을 통해 중·고령층 가구의 소비패턴을 유형화 하며, 각 유형에 따른 영향요인을 분석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패널분석을 통해 제3의 변수를 통제하여 소비패턴의 영향요인에 대해 좀 더 면밀한 분석을 하고자 하며, 통시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노인소득보장정책 수혜액, 소비빈곤여부 등의 영향요인이 소비패턴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영향의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위 연구진행에 따른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가구의 소비빈곤여부는 중·고령 가계의 가계 소비패턴의 양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중·고령 가계의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 수급액의 증감은 가계 소비패턴의 양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변수의 설정

1) 종속변수: 소비패턴

본 연구에서 ‘소비패턴’은 가구의 전체 소비지출액 대비 각각 세부 소비지출항목 구성비의 양상을 몇 개의 패턴으로 구분한 것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소비패턴의 유형 수와 구체적인 특성은 분석 단계에서 설명할 것이다. 이 소비패턴을 분석하기 위한 세부 소비지출항목은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한국복지패널의 세부 소비비목을 재조합해 구성한다. 한국복지패널은 생활비관련 변수로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의류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 사적이전, 세금, 사회보장부담금, 총생활비 등을 조사한다. 여기서 소비지출은 생활비관련 변수 중 사적이전, 세금, 사회보장부담금, 총생활비를 제외한 항목을 합산한 수치를 말한다.

한국복지패널 조사를 토대로 재구성한 소비지출항목은 다음과 같다. 식료품비는 가정식비, 외식비, 주류담배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거비는 월세와 주거관리비를 포함하며, 주거구입비는 포함되지 않았다. 광열수도비는 전기, 난방, 수도비 등이 포함되었다. 가구가사용품비는 가구집기가 사용품비와 보육비 등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 두 세부항목을 나누어 가구집기가사용품비 지출액을 가정용품비 항목으로 설정하고, 보육료비는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로 구성되어 있는 교육비 항목과 합쳐 교육·보육비 항목으로 구성한다. 교통통신비항목은 교통비와 통신비 항목으로 구분한다. 기타소비지출은 경조사비와 종교관련비용, 기타비용으로 구성된다. 의류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양오락비는 세부항목 그대로 구분하여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사적이전, 세금, 사회보장부담금은 비소비지출 항목이므로 소비지출항목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각 항목은 만원/월 단위로 조사되어 각 소비항목은 월평균지출로 계산하며, 총 소비지출에서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소비지출항목 비중으로 설정한다.

<표 4> 소비지출항목비중 구성 및 측정

구분	변수명	조작적 정의	측정
소비지출항목 비중	식료품비 비중	가정식비·외식비·주류담배비 지출액(만원/월) 비중(%)	연속
	주거비 비중	월세·주거관리비 비중(%)	연속
	광열수도비 비중	광열수도비 비중(%)	연속
	가정용품비 비중	가구집기가사용품비 비중(%)	연속
	의류신발비 비중	의류신발비 비중(%)	연속
	보건의료비 비중	보건의료비 비중(%)	연속
	교육·보육비 비중	공교육비·사교육비·보육료비 비중(%)	연속
	교양오락비 비중	교양오락비 비중(%)	연속
	교통비 비중	교통비 비중(%)	연속
	통신비 비중	통신비 비중(%)	연속
	기타소비지출 비중	경조사비·종교관련·기타지출 비중(%)	연속

2) 소비패턴에 대한 영향요인변수

소비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변수를 종합하여 빈곤여부, 공적이전 소득 변수를 두며, 기타 영향요인으로 경제관련 변수, 가구관련 변수, 인구사회학적 변수 및 건강관련 변수 등을 분석한다.

(1) 빈곤여부 변수

빈곤여부 변수로는 상대빈곤의 소득개념 및 소비개념을 측정한다. 기

존 연구들은 소비기준 상대적 빈곤율이 소득기준 상대적 빈곤율보다 낮다고 제시하였다(김교성 외, 2008; 김교성, 2010; Selsnick, 2001). 이는 빈곤가구가 자신의 소득수준을 과소보고하는 측면이 있는 한편, 소득이 아무리 적더라도 식료품비나 주거비와 같이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비용은 일정 수준 이상 지출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김교성 외, 2008: 309; 정운영·정세은; 2010). 특히 앞서 언급하였듯이 노년층의 경우 소득은 대체로 감소하지만 생애자산의 보유 등으로 인해 소비수준과 소득수준의 괴리가 심할 수 있다(여운경, 2003: 2).

소득의 상대적 빈곤선은 OECD(2017)와 배성우 외(2008)의 기준에 따라 가구가처분소득에 대한 중위값의 50%로 정해 분석한다. 가구가처분소득은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포함한 경상소득에서 연금, 사회보험, 조세 등의 비소비지출을 차감한 수치이다(박찬용 외, 2002). 한편 소비기준 상대적 빈곤여부는 김교성 외(2008)의 연구를 토대로 가구 총 생활비에서 세금과 사회보장분담금을 차감한 중위소비의 50%를 빈곤선으로 정한다. 가구의 총 소득과 생활비는 OECD에서 제시하는 균등화지수를 활용하여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다. 균등화중위가구소득과 균등화중위가구소비는 2016년 자료까지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 웹사이트에 나타난 자료를 이용한다.⁷⁾

(2) 공적이전 소득 변수

공적이전 소득 변수에는 사회보험급여,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 급여, 기타정부보조금급여를 채택한다. 사회보험급여는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건강보험 등을 포함하며, 기초생활보장급여는 2015년 맞춤형급여 전환이후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총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기초(노령)연금 급여는 수급대상이 소득하위 70%로 변경된 기초노령연금과 현행 기초연금을 포함해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기타정부보조급여에는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 한부모가족지원, 가정위탁금, 양

7)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http://green.kostat.go.kr/blife/result-idx.do?oaYear=2011&idctId=201304858> (검색일: 2019. 04. 23.)

육수당, 보육료지원, 학비지원, 국가유공자 보조금, 농어업정부보조금, 긴급복지지원금, 바우처지원금, 근로장려세제, 급식비지원, 에너지감면, 통신비감면, 기타정부보조금을 포함한다. 공적이전 소득 변수는 모두 연간 소득액으로 조사되었으므로, 12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액으로 변환한다.

(3) 경제 관련 변수

경제관련 변수에는 순자산과 가처분소득, 가구주 취업여부를 채택한다. 순자산은 가구의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값에 자연로그를 취해 계산한다.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순자산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표시한다. 가처분소득은 순자산과 마찬가지로 가구 균등화 가처분소득에 자연로그를 취해 계산한다. 가처분소득이 음수이면 역시 0으로 표시한다.

(4) 가구관련 변수

가구관련 변수로는 주거형태, 가구유형, 거주지역을 채택한다. 주거형태는 자가인 경우와 나머지 전세·월세 등을 구분한다. 가구유형은 가구 구성에 관련된 변수로서, 독거가구와 부부가구, 기타가구를 구분한다. 거주지역은 서울과 광역시, 기타지역을 구분한다.

(5) 인구사회학적 변수 및 건강관련 변수

인구사회학적 변수로는 가구주의 성별, 노인여부, 교육수준을 채택한다. 가구주가 만 65세 이상일 경우 1로 측정하며, 그 미만일 경우 0으로 측정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모두 측정 당시의 연령이 만 55세를 초과하므로 만 65세가 아닌 가구주는 준노령 가구에 해당된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의 경우 전문대 이상, 고졸, 중졸이하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건강관련 변수는 만성질환 여부를 측정한다.

<표 5> 독립 변수 및 영향요인 변수 구성 및 측정

구분	변수명		조작적 정의	측정
독립변수	빈곤여부 변수	소득 빈곤여부	가구 가처분소득 중위소득 50% 미만(0), 이상(1)	명목
		소비 빈곤여부	가구총지출 중위50% 미만(0), 이상(1)	명목
	공적이전 소득 변수	사회보험급여 수급액	$\log_n(\text{공적연금 수급 연간소득액}/12)$	연속
		기초생활보장 수급액	$\log_n(\text{기초생활보장 연간소득액}/12)$	연속
		기초(노령)연금 수급액	$\log_n(\text{기초(노령)연금 연간소득액}/12)$	연속
		기타 정부보조급여 수급액	$\log_n(\text{기타 정부보조급여 연간소득액}/12)$	연속
	영향요인 변수	경제관련 변수	순자산	$\log_n(\text{총 자산}-\text{총 부채})$ 순자산액이 음수인 경우: 0
가처분소득			$\log_n(\text{가구 균등화 가처분소득})$ 가처분소득이 음수인 경우: 0	연속
가구주 취업여부			취업(0), 미취업(1)	명목
가구관련 변수		주거형태	자가(0), 전세 및 월세 등(1)	명목
		가구유형	독거가구(0), 부부가구(1), 동거가구(2)	명목
		거주지역	서울(1), 광역시(2), 기타지역(3)	명목
인구사회학적 변수		가구주 성별	남자(0), 여자(1)	명목
		가구주 노인여부	준노령(0), 노령(1)	연속
		가구주 교육수준	전문대이상(0), 고졸(1), 중졸이하(2)	명목
건강 관련 변수	만성질환 여부	없음(0), 있음(1)	명목	

제 2 절 분석모형의 구성

1. 분석자료

위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자료는 한국복지패널 5차부터 12차년도까지의 자료(2010년 ~ 2017년 조사)이다. 3차 년도 조사부터 구체적인 소비 비목별 조사항목이 추가되었으며, 5차 년도 조사에서 교통비와 통신비가 분리되어 측정하였기 때문에 1~4차 년도 조사는 분석대상 자료에 포함하지 않는다. 한국복지패널의 최초 원표본 가구는 7,072가구였으나, 점차 조사대상에서 탈락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7차 년도 조사에서 1,800가구가 신규 유입되었다. 12차 년도의 총 표본가구는 6,879가구이다. 노인가구의 소비지출 및 소득을 조사할 수 있는 자료로 국민노후보장패널과 고령화연구패널 자료도 존재한다. 하지만 한국복지패널은 제주도와 농어가 등 전국의 가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규모가 가장 크다. 또한 2006년 이후 매년 자료를 조사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년도의 조사자료가 있기 때문에 한국복지패널을 연구자료로 채택하였다.

2. 분석대상

분석 대상은 한국복지패널조사의 5차 년도부터 12차 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참여한 가구 중 12차 년도 조사의 대상년도인 2016년 기준 세대별 가구주의 나이가 노령인 집단과 준노령인 집단을 추출하였다. 노령인구의 구분은 연구에 따라 보통 55~65세 사이에서 이루어진다(성영애·양세정, 1997). 한편 김시월과 조향숙(2015)의 연구에서는 중·고령층의 기준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14.5.23.)」의 규정을 준용하여 50세 이상 55세 미만의 준고령층과 55세 이상 고령층으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OECD의 노인인구 기준에 부합하며 기초연금의 수급기준인 만 65세 이상을 노령인구로 규정한다. 또

한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를 준노령 인구로 규정하였다.

본 연구의 총 분석대상 가구는 ‘노령 가구주 가구’와 ‘준노령 가구주 가구’를 합한 1033가구이다. 이 중 ‘노령 가구주 가구’는 2016년 기준 만 65세(1951년생)에서 만 71세(1945년생)인 가구(총 484가구)로서, 분석 대상의 처음 년도인 2009년에는 가구주가 모두 준노령이었다가 분석 대상의 마지막 년도인 2016년에 모두 노령인구로 전환되는 연령대로 설정하였다. ‘준노령 가구주 가구’는 본 연구의 준노령 인구에 속하면서도 최대한 베이비붐 세대에 가깝게 설정하여, 가구주가 2016년 기준 만 55세(1961년생)에서 만 61세(1955년생)인 가구(총 549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두 집단은 분석동안 매년 조사에 참여했던 가구이며, 가구주의 교체가 있더라도 바뀐 가구주의 연령이 해당 집단의 연령범위 내에 있으면 대상에 포함되었다.

노인 인구의 소비패턴에 관한 연구들 중에서는 연구 대상을 노인 단독가구, 노인 부부가구로 한정할 경우도 많았다(최옥금, 2011; 김진훈, 2016). 그러나 이 경우 노년층인 부모와 자식으로 구성된 가구 및 조손 가정 등 가구에 비노인 구성원이 포함되지만 노인이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를 간과하게 된다. 특히 조손가정은 빈곤위험과 복지수요가 높다는 점에서 노인가구의 소비패턴 분석대상에 포함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노인 구성원의 포함여부와 상관없이 가구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노령 가구를 구분하여 분석할 것이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자료 분석을 위해 SAS 9.4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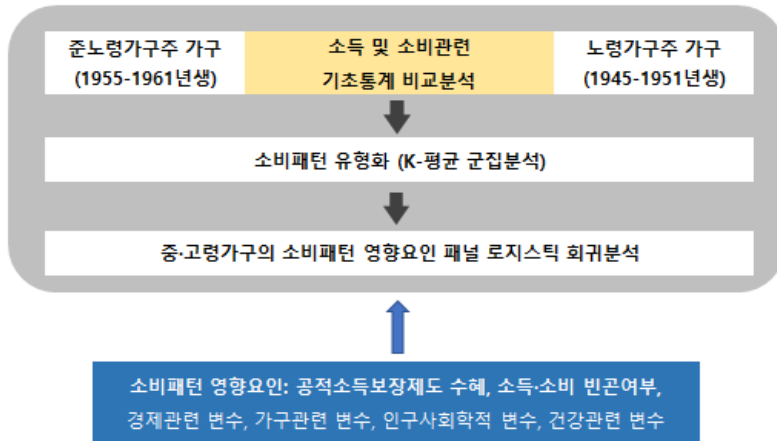
첫째, 중·고령층 가구의 소비패턴과 공적소득보장제도 수급여부, 빈곤여부 등 기초통계를 분석한다. 이후 소비패턴을 유형화하기 위해 K-평균 군집분석(k-means cluster analysis)를 사용할 것이다. 군집분석은 연구대상에 포함된 개별 개체가 보유한 특성을 표현한 변수 값을 기준으로

집단을 설정하여 각 개체가 어떤 집단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분석방법이다(황인욱·이태진, 2018: 240). 본 연구에서 활용할 K-평균 군집분석은 비계층적 군집분석 방법으로, n개의 특성을 지닌 개체들을 연구자가 정하는 K개의 군집으로 분류하도록 분석하는 방법이다. 우선 임의의 군집 중심점을 정한 후, 각 개체들과 그 개체가 속한 군집의 평균 벡터차이가 최소화 될 때까지 군집의 중심과 경계를 수정해 최종 군집을 설정하는 것이 K-평균 군집분석의 분석방법이다. 일반적으로 K-평균 군집분석의 적정 군집 수는 군집분석 결과를 보고 각 군집 내의 개체수가 전체 개체수에 비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경우가 없도록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설정된다.

둘째, 2017년 만 65세~72세인 노령가구의 공적소득보장제도 수급여부 등의 영향요인이 소비빈곤 여부와 소비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다. 패널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통시적으로 사회보장,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기타 공적이전 수급과 소득빈곤, 소비빈곤여부,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중·고령층 가구가 특정 소비패턴에 속할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한다.

4. 분석모형

<그림 1> 분석모형



제 4 장 분석결과

제 1 절 기술통계분석

1. 분석 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다음 <표 6>에 나타난 본 연구의 분석대상가구의 일반적 특성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빈곤 여부를 보면 소득빈곤 가구와 소비빈곤 가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균등화 가구가 처분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인 빈곤가구는 2009년 529 가구(51.21%)에서 2016년 554 가구(53.63%)로 약 2.4%p 증가하였다. 또한 균등화 소비지출액이 중위소비 대비 50% 미만인 소비빈곤가구는 2009년 372 가구(36.01%)에서 385 가구(37.27%)로 약 1.2%p 증가하였다. 8년 평균치를 계산했을 때 소득빈곤가구의 수는 약 549.5 가구(53.19%)인데 비해 소비빈곤가구의 수는 약 406.5 가구(46.81%)이다. 소득빈곤가구의 비율보다 소비빈곤가구의 비율이 약 6%p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이다. 이는 노년층의 소득 상대빈곤율이 54.7%인 반면 소비 상대빈곤율은 41%로 약 13.6%p차이를 보이는 등(김교성 외, 2008: 313), 소득빈곤율이 소비빈곤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김교성 외, 2008; 김교성, 2010; Selsnick, 2001).

공적이전수급여부를 보면, 사회보험 수급가구가 2009년 329 가구(31.85%)에서 2016년 474 가구(45.89%)로 약 15%p 증가하였다. 경제관련 특성에서 취업한 가구주의 수는 2009년 786명(76.09%)에서 2016년 687명(66.51%)로 약 10%p 감소하였는데, 국민연금 수급연령 도달 및 퇴직으로 인한 퇴직급여의 수령자가 늘어나는 것이 사회보험 수급가구 증가를 일부 설명할 수 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2009년 117

가구(11.33%)에서 2016년 336 가구(32.53%)로 약 21%p나 증가하였다. 하지만 가구주의 만 65세 이상 비율이 2009년 0%에서 2016년 약 47%까지 증가하는 것을 보았을 때, 기초연금이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도 기초연금 지급률의 증가는 매우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타정부보조급여 수급 가구는 2009년 378가구(36.59%)에서 2016년 612가구(59.24%)로 약 23%p나 증가하였는데, 이는 새로운 정부보조급여의 신설과 함께 정책의 성숙도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는 2009년 112 가구(10.84%)에서 2016년 109 가구(10.55%)로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가구관련 특성을 보면, 자가 주거가구의 수가 2009년 655 가구(63.41%)에서 2016년 683 가구(66.12%)로 조사기간 동안 매우 소폭 상승하였으며, 평균치는 약 666.9 가구(64.56%)이다. 분석 대상 가구 중 독거가구의 수는 2009년 159 가구(15.39%)에서 2016년 218 가구(21.1%)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부부가구의 수 역시 동 기간 동안 207 가구(20.04%)에서 2016년 317 가구(30.6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동거가구의 수는 동 기간 동안 667 가구(64.57%)에서 498 가구(48.21%)로 감소하였다. 조사기간 동안 분가 및 사별 등의 이유로 조손가정 등 동거가구에서 부부가구 및 독거가구로, 부부가구에서 독거가구로 가구구성이 변화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거주지역을 보면 서울 거주 가구는 2009년 189 가구(18.30%)에서 177 가구(17.13%)로 약간 감소하였으며, 광역시 거주 가구는 2009년 287 가구(27.78%)에서 2016년 279 가구(27.01%)로 역시 소폭 감소하였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평균치를 보면 기타지역 거주 가구가 약 564 가구(54.6%)로 서울과 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중이 조금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남성의 수가 2009년 791명(76.57%)에서 2016년 787명(76.19%)으로 소폭 감소했다. 가구 내 가구주가 교체되면서 가구주 성별이 교체되었기 때문에 가구주 성별 비중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연도별로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평균치로 분석하면, 전문대 이상 졸업 가구주는 약 130.8명(12.66%)이었으며, 고등학교 졸업 가구주는 약 370.4명(35.85%)이었고 전체 가구주의 51.49%인 약 531.9명이 중졸 이하 가구주로 나타났다. 만성 질환 보유 가구주의 수는 2009년 544명(52.66%)에서 2016년 755명(73.09%)으로 20%p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 65세를 전후하여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건강이 악화되는 가구주의 수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 준노령가구주 가구와 노령가구주 가구의 비교

아래 <표 7>을 확인하면 2016년 기준 준노령가구주 가구와 노령가구주 가구의 빈곤, 공적이전 수급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차이를 알 수 있다. 먼저 빈곤여부를 보면, 준노령가구주는 2009년에서 2016년으로 갈수록 소득빈곤가구의 비율이 44.8%에서 40.8%로 감소하였다. 이는 노령가구주 가구의 소득빈곤 비율이 58.5%에서 68.2%로 10%p나 증가하는데 것에 비해 매우 대조적이다. 한편 본 연구의 자료인 한국복지패널은 빈곤가구와 비빈곤가구가 동수표집되어 OECD가 산출한 2015년 한국 노인 빈곤율 45.7%보다 본 표본의 소득빈곤율이 약 23%p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본 표본은 조사대상기간동안 매년 응답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표본의 소득빈곤율 산출결과를 일반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소비빈곤비율 역시 소득빈곤율과 마찬가지로 준노령가구주 가구에서는 2009년 27.9%에서 2016년 25.9%로 소폭 감소하였지만 노령가구주 가구에서는 약 45%에서 약 50%로 역시 5%p 증가하였다. 2016년 준노령가구주 가구와 2009년 노령가구주 가구의 가구주 연령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를 비교하면 양 집단의 차이가 역시 확실히 드러난다. 이를 통해 베이비붐 이전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 빈곤에 더욱 취약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공적이전수급여부를 비교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준노령가구주

가구와 노령가구주 가구 모두 평균 약 10% 수준을 유지했다. 기초(노령) 연금의 경우 2009년에는 양 집단 모두 미수급자 비율이 88% 내외였으나 노령가구주 가구의 경우 2016년 미수급자의 비율이 40%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노인 가구주 가구의 가구주 혹은 그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 연령에 진입하는 동시에, 빈곤율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타정부보조급여 수급 비율 역시 2009년에는 준노령가구주 가구가 35.3%로 노령가구주 가구의 약 38%와 비슷하였으나, 2016년에는 노령가구주 가구의 75% 이상이 기타정부보조급여를 수급하여 약 43.4%인 준노령가구주 가구와 차이를 벌렸다.

그 외 변수 중에서는 취업자 비율에서 2016년 기준 준노령가구주 가구의 약 80%와 노령가구주 가구의 약 51%가 크게 차이가 났다. 이는 은퇴연령진입으로 인한 현상으로 보이지만, 준노령가구주 가구의 2016년 근로자 비율과 2009년 노령가구주 가구의 근로자비율 67% 역시 13%가량 차이를 보였다. 만성질환여부와 가구주 여성비율 역시 노령가구주 가구의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연령차에 큰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대 이상 고학력자 비율은 노령가구주 가구가 준노령가구주 가구에 비해 반 정도인 8.5% 내외에 그쳤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2016년 현재 노령가구주인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 신체적, 경제적으로 취약하며 이는 연령차이 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으며, 공적이전에 더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분석 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분포 및 빈도(%)

변수			분석대상 가구 전체(N=1033)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균
빈곤여부 변수	소득빈곤 여부	소득 빈곤	529 (51.21)	512 (49.56)	542 (52.47)	531 (51.40)	568 (54.99)	576 (55.76)	584 (56.53)	554 (53.63)	549.5 (53.19)
		소득 비빈곤	504 (48.79)	521 (50.44)	491 (47.53)	502 (48.60)	465 (45.01)	457 (44.24)	449 (43.47)	479 (46.37)	483.5 (46.81)
	소비빈곤 여부	소비 빈곤	372 (36.01)	388 (37.56)	398 (38.53)	393 (38.04)	439 (42.50)	451 (43.66)	426 (41.24)	385 (37.27)	406.5 (39.35)
		소비 비빈곤	661 (63.99)	645 (62.44)	635 (61.47)	640 (61.96)	594 (57.50)	582 (56.34)	607 (58.76)	648 (62.73)	626.5 (60.65)
공적이전 수급여부	사회보험 수급여부	사회보험급 여 미수급	704 (68.15)	664 (64.28)	646 (62.54)	625 (60.50)	622 (60.21)	607 (58.76)	592 (57.31)	559 (54.11)	627.4 (60.73)
		사회보험급 여 수급	329 (31.85)	369 (35.72)	387 (37.46)	408 (39.50)	411 (39.79)	426 (41.24)	441 (42.69)	474 (45.89)	405.6 (39.27)
	기초생활 보장수급 여부	기초생활보 장 미수급	921 (89.16)	925 (89.55)	924 (89.45)	928 (89.84)	925 (89.55)	934 (90.42)	931 (90.13)	924 (89.45)	926.5 (89.69)
		기초생활보 장 수급	112 (10.84)	108 (10.45)	109 (10.55)	105 (10.16)	108 (10.45)	99 (9.58)	102 (9.87)	109 (10.55)	106.5 (10.31)
	기초(노령) 연금수급 여부	기초(노령)연 금 미수급	916 (88.67)	899 (87.03)	876 (84.80)	852 (82.48)	815 (78.90)	769 (74.44)	747 (72.31)	697 (67.47)	821.4 (79.51)
		기초(노령)연 금 수급	117 (11.33)	134 (12.97)	157 (15.20)	181 (17.52)	218 (21.10)	264 (25.56)	286 (27.69)	336 (32.53)	211.6 (20.49)
	기타정부 보조급여 수급여부	기타정부보조 급여 미수급	655 (63.41)	656 (63.50)	639 (61.86)	621 (60.12)	625 (60.50)	489 (47.34)	457 (44.24)	421 (40.76)	570.4 (55.22)
		기타정부보 조급여 수급	378 (36.59)	377 (36.50)	394 (38.14)	412 (39.88)	408 (39.50)	544 (52.66)	576 (55.76)	612 (59.24)	462.6 (44.78)

변수			분석대상 가구 전체(N=1033)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균
경제관련 변수	가구주 취업상태 여부	취업	786 (76.09)	777 (75.22)	759 (73.48)	767 (74.25)	766 (74.15)	730 (70.67)	711 (68.83)	687 (66.51)	747.9 (72.40)
		미취업	247 (23.91)	256 (24.78)	274 (26.52)	266 (25.75)	267 (25.85)	303 (29.33)	322 (31.17)	346 (33.49)	285.1 (27.60)
가구관련 변수	주거형태	자가	655 (63.41)	656 (63.50)	659 (63.79)	656 (63.50)	662 (64.09)	680 (65.83)	684 (66.21)	683 (66.12)	666.88 (64.56)
		전세 및 월세 등	378 (36.59)	377 (36.50)	374 (36.21)	377 (36.50)	371 (35.91)	353 (34.17)	349 (33.79)	350 (33.88)	366.12 (35.44)
	가구유형	독거가구	159 (15.39)	175 (16.94)	181 (17.52)	190 (18.39)	196 (18.97)	200 (19.36)	207 (20.04)	218 (21.10)	190.8 (18.46)
		부부가구	207 (20.04)	218 (21.10)	235 (22.75)	253 (24.49)	272 (26.33)	288 (27.88)	305 (29.53)	317 (30.69)	261.9 (25.35)
		동거가구	667 (64.57)	640 (61.96)	617 (59.73)	590 (57.12)	565 (54.70)	545 (52.76)	521 (50.44)	498 (48.21)	580.4 (56.19)
	거주지역	서울	189 (18.30)	192 (18.59)	192 (18.59)	193 (18.68)	189 (18.30)	185 (17.91)	177 (17.13)	177 (17.13)	186.8 (18.08)
		광역시	287 (27.78)	286 (27.69)	284 (27.49)	280 (27.11)	281 (27.20)	279 (27.01)	284 (27.49)	279 (27.01)	282.5 (27.35)
		기타지역	557 (53.92)	555 (53.73)	557 (53.92)	560 (54.21)	563 (54.50)	569 (55.08)	572 (55.37)	57 (55.86)	563.8 (54.57)
	인구 사회학적 변수	가구주 성별	남자	791 (76.57)	790 (76.48)	792 (76.67)	792 (76.67)	792 (76.67)	790 (76.48)	789 (76.38)	787 (76.19)
여자			242 (23.43)	243 (23.52)	241 (23.33)	241 (23.33)	241 (23.33)	243 (23.52)	244 (23.62)	246 (23.81)	242.6 (23.49)

변수			분석대상 가구 전체(N=1033)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균
	가구주 교육수준	전문대 이상	128 (12.39)	129 (12.49)	130 (12.58)	131 (12.68)	132 (12.78)	132 (12.78)	132 (12.78)	132 (12.78)	130.8 (12.66)
		고졸	372 (36.01)	372 (36.01)	373 (36.11)	371 (35.91)	369 (35.72)	369 (35.72)	369 (35.72)	368 (35.62)	370.4 (35.85)
		중졸 이하	533 (51.60)	532 (51.50)	530 (51.31)	531 (51.40)	532 (51.50)	532 (51.50)	532 (51.50)	533 (51.60)	531.9 (51.49)
	만 65세 이상 여부	만 65세 미만	1033 (100)	950 (91.97)	872 (84.41)	784 (75.90)	720 (69.70)	660 (63.89)	601 (58.18)	549 (53.15)	771.13 (74.65)
		만 65세 이상	0 (0)	83 (8.03)	161 (15.59)	249 (24.10)	313 (30.30)	373 (36.11)	432 (41.82)	484 (46.85)	261.88 (25.35)
건강관련 변수	만성질환 여부	없음	489 (47.34)	421 (40.76)	412 (39.88)	350 (33.88)	324 (31.36)	339 (32.82)	323 (31.27)	278 (26.91)	367 (35.53)
		있음	544 (52.66)	612 (59.24)	621 (60.12)	683 (66.12)	709 (68.64)	694 (67.18)	710 (68.73)	755 (73.09)	666 (64.47)

<표 7> 준노령가구주 및 노령가구주 가구의 일반적 특성 비율 비교(%)

변수			분석대상 가구 전체(N=1033)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균
빈곤여부 변수	소득빈곤	준노령	44.81	41.53	45.54	43.17	45.36	43.17	44.26	40.80	43.58
		노령	58.47	58.68	60.33	60.74	65.91	70.04	70.45	68.18	64.10
	소비빈곤	준노령	27.87	27.50	27.69	27.50	29.33	31.15	26.78	25.87	27.96
		노령	45.25	48.97	50.83	50.00	57.44	57.85	57.64	50.21	52.27
공적이전 수급여부	사회보험 수급	준노령	9.47	10.02	10.38	11.29	12.20	14.57	16.03	23.32	13.41
		노령	57.23	64.88	68.18	71.49	71.07	71.49	72.93	71.49	68.60
	기초생활 보장수급	준노령	11.11	10.38	10.56	10.38	10.02	8.74	9.29	10.20	10.09
		노령	10.54	10.54	10.54	9.92	10.95	10.54	10.54	10.95	10.57
	기초노령 연금수급	준노령	10.75	9.47	9.84	9.11	9.11	8.56	8.56	7.83	9.15
		노령	11.98	16.94	21.28	27.07	34.71	44.83	49.38	60.54	33.34
	기타정부 보조급여 수급	준노령	35.34	35.88	36.25	38.62	36.79	41.17	43.35	45.17	39.07
		노령	38.02	37.19	40.29	41.32	42.56	65.70	69.83	75.21	51.27

변수			분석대상 가구 전체(N=1033)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균
경제관련 변수	가구주 취업여부	준노령	83.97	84.52	83.24	82.70	84.34	80.87	81.42	79.96	82.63
		노령	67.15	64.67	62.40	64.67	62.60	59.09	54.55	51.24	60.80
가구관련 변수	주거형태 자가여부	준노령	57.74	57.38	57.92	58.11	58.65	60.66	61.38	61.57	59.18
		노령	69.83	70.45	70.45	69.63	70.25	71.69	71.69	71.28	70.66
	가구유형 (준노령)	독거가구	10.38	11.29	11.66	12.20	13.30	13.30	13.66	14.21	12.50
		부부가구	9.47	9.84	10.75	12.75	13.48	15.85	16.76	17.49	13.30
		동거가구	80.15	78.87	77.60	75.05	73.22	70.86	69.58	68.31	74.21
	가구유형 (노령)	독거가구	21.07	23.35	24.17	25.41	25.41	26.24	27.27	28.93	25.23
		부부가구	32.02	33.88	36.36	37.81	40.91	41.53	44.01	45.66	39.02
		동거가구	46.90	42.77	39.46	36.78	33.68	32.23	28.72	25.41	35.74
	기타지역 거주	준노령	53.19	52.64	53.19	53.01	53.19	53.37	53.73	53.92	53.28
		노령	54.75	54.96	54.75	55.58	55.99	57.02	57.23	58.06	56.04

변수			분석대상 가구 전체(N=1033)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균
인구 사회학적 변수	가구주 남성비율	준노령	80.15	80.15	80.15	80.15	80.15	79.78	79.78	79.60	79.99
		노령	72.52	72.31	72.73	72.73	72.73	72.73	72.52	72.31	72.57
	가구주 교육수준 (준노령)	전문대 이상	15.85	16.03	16.03	16.21	16.39	16.39	16.39	16.39	16.21
		고졸	43.35	43.35	43.53	43.53	43.17	43.17	43.35	43.35	43.35
		중졸 이하	40.80	40.62	40.44	40.26	40.44	40.44	40.26	40.26	40.44
	가구주 교육수준 (노령)	전문대 이상	8.47	8.47	8.68	8.68	8.68	8.68	8.68	8.68	8.63
		고졸	27.69	27.69	27.69	27.27	27.27	27.27	27.07	26.86	27.35
		중졸 이하	63.84	63.84	63.64	64.05	64.05	64.05	64.26	64.46	64.02
	건강관련 변수	만성질환 여부	준노령	41.71	47.91	48.82	55.37	58.83	56.47	57.38	63.21
노령			65.08	72.11	72.93	78.31	79.75	79.34	81.61	84.30	76.68

제 2 절 소비패턴 군집분석 결과

1. 분석 대상 가구의 소비패턴

각 년도 별로 조사된 분석 대상 가구를 소비지출항목 비중을 기준으로 패턴화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적절한 총 군집의 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연구를 참고하여 각 군집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는 군집 수를 도출하였다. 아래 <표 8>을 보면, 3개 유형 구분에서는 전체 가구의 약 70%가 한 군집에 속해있으며, 4개 유형 구분에서 역시 전체 가구의 약 50%가 한 군집에 속해있어 편중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6개 유형의 경우 개체 수가 가장 작은 군집이 전체의 약 1%만 차지하는 것으로 볼 때 지나치게 군집이 세분화 되어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김진훈, 2016: 915; 김진훈·고보선, 2016: 489). 그 중간인 5개 유형 구분에서는 전체 가구의 최대 약 44%에서 최소 약 5%가 한 군집에 속해있어 타 구분에 비해 비교적 균등한 분포를 보이기 때문에 5개 유형으로 나누는 결과를 채택하였다.

<표 8> K-평균 군집분석에 의한 유형화 결과 및 비중(%)

유형 개수 구분	2개 유형	3개 유형	4개 유형	5개 유형	6개 유형
1	4239 (51.29)	6949 (84.09)	4176 (50.53)	3655 (44.23)	3579 (43.31)
2	4025 (48.71)	858 (10.38)	2966 (35.89)	2782 (33.66)	2830 (34.24)
3	-	457 (5.53)	694 (8.4)	746 (9.03)	698 (8.45)
4	-	-	428 (5.18)	654 (7.91)	634 (7.67)
5	-	-	-	427 (5.17)	427 (5.17)
6	-	-	-	-	96 (1.16)
총 개체 수	8264	8264	8264	8264	8264

위에서 도출한 적절 군집 수를 바탕으로 분석 대상 가구를 소비지출 항목 비중에 따라 유형화한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첫 번째 군집은 총 746 가구로 구성되며 지출항목 중 식료품비 비중이 평균 약 29%로 가장 높지만, 다른 군집과 비교하면 주거비 지출의 비율이 평균 23.63%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 유형이다. 이처럼 5개 유형 중 주거비 지출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유형을 주거비 중심형으로 명명하였다. 주거비 중심형은 가계소비지출 평균이 월 172만원으로 군집들 중 가장 적은 수치를 나타냈다.

두 번째 군집은 총 2,782 가구가 속해있으며, 각 지출항목 중 경조사비와 종교관련비용이 포함된 기타소비지출 비율이 평균 35.20%로 가장 높은 유형이다. 최옥금(2011)의 연구를 참고하여 기타소비지출을 사회적 관계에 관한 비용으로 간주하여 첫 번째 유형을 관계비 중심형이라 명명한다(최옥금, 2011: 285-286). 관계비 중심형에 속하는 가구는 기타소비지출과 함께 교양오락비지출의 비중이 5개 유형 중에서 가장 높으며, 월 평균 지출액 합계 역시 5개 유형 중 2위인 약 336.6만 원이다.

세 번째 군집은 654 가구가 속해있는 군집으로서, 지출항목 중 보건의료비지출 비중이 평균 28.98%로 가장 높은 유형이기 때문에 의료비 중심형으로 명명한다. 의료비 중심형의 월 평균 보건의료지 지출액은 약 65만 원이며, 월 평균 총 지출액은 약 219.5만 원으로 5개 유형 중 중위권 수준의 지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네 번째 군집은 가장 많은 3,655 가구가 속해있는 군집으로서, 지출항목 중 식료품비 지출의 비중이 평균 37.6%로 가장 높은 유형이다. 따라서 이 군집은 식비 중심형이라 명명한다. 한편, 식비 중심형의 월 평균 식료품비 지출액은 약 70.4만원으로 5개 군집 중 3위였다. 총 소비지출액은 약 205만 원으로 역시 중위권 수준이었다.

마지막 군집은 가장 숫자가 적은 427 가구가 속해있으며, 교통비의 비중이 41.6%로 교통비 중심형이라 명명한다. 교통비 중심형은 지출액 기준으로 교양오락비, 식료품비, 의류신발비 교육·보육비 등에서 5개 군집 중 높은 지출순위를 나타내 여가, 문화 기호품 소비액이 높았으며, 함께

소비지출액 역시 약 48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표 9> 군집유형별 평균 소비지출액 및 비중

소비지출항목		1. 주거비 중심형 (746 가구)	2. 관계비 중심형 (2782 가구)	3. 의료비 중심형 (654 가구)	4. 식비 중심형 (3655 가구)	5. 교통비 중심형 (427 가구)	전체 평균
소비 지출액 (만원)	식료품비	43.96	75.82	51.72	70.43	78.94	54.21
	광열수도비	10.13	14.51	13.10	12.83	14.96	12.50
	가정용품비	8.69	6.84	5.99	4.88	7.77	4.32
	의류신발비	4.27	13.27	6.36	7.81	13.41	6.14
	보건의료비	8.12	14.91	65.06	9.54	18.51	17.55
	교육·보육비	6.53	17.93	4.32	17.96	18.85	2.56
	교양오락비	4.60	15.65	6.72	7.70	13.72	6.75
	교통비	10.63	30.82	16.12	18.87	209.35	19.59
	통신비	8.07	15.86	8.76	11.71	16.88	7.94
	주거비	41.81	8.48	6.09	6.11	10.19	8.39
	기타소비지출	25.42	122.55	35.26	37.09	77.92	44.26
합계	172.22	336.65	219.51	204.92	480.51	184.21	
지출 비중 (%)	식료품비	29.38	24.41	25.59	37.62	18.33	27.07
	광열수도비	7.54	5.17	7.25	7.85	3.84	6.33
	가정용품비	4.38	2.03	2.64	2.36	1.61	2.61
	의류신발비	2.28	3.75	2.66	3.49	2.68	2.97
	보건의료비	4.39	4.57	28.98	4.77	3.97	9.33
	교육·보육비	2.38	4.04	1.22	5.80	3.30	3.35
	교양오락비	2.30	4.01	2.64	3.22	2.66	2.97
	교통비	5.64	9.13	6.80	8.50	41.63	14.34
	통신비	5.00	4.97	4.03	5.75	3.85	4.72
	주거비	23.63	2.72	3.19	3.28	2.23	7.01
	기타소비지출	13.08	35.20	14.98	17.37	15.89	19.31

다음은 각 유형별 특성을 분석해 보았다. <표 10>을 참조하면, 우선 소득 상대 빈곤율은 주거비 중심형이 약 79.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의료비 중심형과 식비 중심형이 각각 68.7%, 64.9%로 뒤를 이었고, 관계비 중심형과 교통비 중심형의 소득빈곤율은 30%내외로 다른 유형과 큰 차이를 보였다. 한편 소비 상대 빈곤율은 의료비 중심형이 약 40%, 식비 중심형이 약 55.4%로 오히려 식비 중심형의 소비빈곤율이 더 높았다. 이는 식비에 비해 의료지출의 비용부담이 소득과 상관없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유형별 월 가구 균등화 소비지출액 평균은 식비 중심형이 약 125만 원으로 가장 낮았는데, 가구 균등화 가처분소득액 평균과 비교하면 식비 중심형이 소득은 약 164만 원으로 높은 편이지만 소비는 주거비 중심형 수준인 약 125만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비 중심형이 교양오락비, 가정용품비 지출액 평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식비 외에 큰 소비를 하지 않는 평균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가처분소득액과 소비지출액을 비교하면 교통비중심형이 평균 소득 266만 원보다 소비액이 13만 원 가량이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비 중심형이 뒤이어 소득의 거의 95% 이상을 지출하고, 식비 중심형과 관계비 중심형은 소득보다 소비가 현저히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대체로 교통비 중심형과 관계비 중심형이 소득과 소비의 측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의료비 중심형과 식비 중심형이 뒤를 이었다. 반면 주거비 중심형은 낮은 수준의 소득과 소비수준을 보였다.

가구주 취업여부를 볼 때, 교통비 중심형의 가구주 취업률이 83.8%로 가장 높았으며, 관계비 중심형이 82%로 바로 뒤를 이었다. 또한 식비 중심형도 70% 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의료비 중심형과 주거비 중심형은 각각 57%와 53%로 최저 수준을 보였다. 공적이전 소득유무가 흥미로운데, 가장 경제적 지위가 낮은 주거비 중심형은 사회보험 수급률이 28.7%에 그쳐 가장 낮았고, 의료비 중심형이 55.5%로 가장 높았다. 대신 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주거비 중심형이 31.5%로 모든 군집들 중에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의료비 중심형이 30.9%로 가장 높았고, 식비 중심형과 주거비 중심형이 24%내외로 비

스했다. 기타정부보조급여 수급률도 주거비 중심형이 제일 높은 55.4%를 기록했고, 의료비 중심형과 식비 중심형이 50%내외로 뒤를 이었다. 또한 관계비 중심형과 교통비 중심형은 사회보험수급률과 기타정부보조급여 수급여부에서 30%후반을 기록했고, 다른 공적이전 수급률은 매우 낮았다.

가구 유형을 보면 주거비 중심형의 독거 비율이 50%를 상회하였으며, 의료비 중심형이 24%로 뒤를 이었다. 주거비 중심형의 자가비율은 25%에 그쳤고, 서울과 광역시에 약 57%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 여성비율이 42.5%로 군집들 중 가장 높았다. 이는 도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의료비 중심형은 낮은 교육정도를 기록하였고, 부부가구 비율이 군집들 중 가장 높았으며, 노인가구주비율 역시 가장 높아 42.81%에 달했다. 관계비 중심형과 교통비 중심형의 경우 동거가구 비율이 높았으며, 가구주가 남성인 비율이 80%를 넘는 수치를 보여 가장 높았다. 이는 주거비 중심형과 반대되는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비패턴의 가구일수록 높은 교육수준의 가구주일 확률이 높았다. 가구주 만성질환보유비율은 의료비중심형의 85.3%뿐만 아니라 식비 중심형과 주거비 중심형도 각각 64.8%, 68.9%의 높은 수치를 보였다. 군집별 평균치이긴 하지만 이 분석결과를 통해 소비패턴 별로 사회경제적 특성이 명확히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 군집유형별 영향요인 특성 비율(%) / 금액(만 원)

구분		1. 주거비 중심형	2. 관계비 중심형	3. 의료비 중심형	4. 식비 중심형	5. 교통비 중심형
소득빈곤	빈곤	79.62	31.2	68.65	64.9	26.46
	비빈곤	20.38	68.8	31.35	35.1	73.54
소비빈곤	빈곤	60.72	17	40.06	55.38	9.37
	비빈곤	39.28	83	59.94	44.62	90.63
균등화 소비지출액		124.7	198.7	149.0	124.5	279.9
균등화 가처분 소득액		129.4	256.8	162.8	163.6	266.4
순 자산액		4735.8	21336.8	14593.5	11743.0	20249.3
가구주 취업여부	취업	53.49	82.03	57.65	70.23	83.84
	미취업	46.51	17.97	42.35	29.77	16.16
사회보험 수급여부	미수급	71.31	60.24	44.5	61.81	61.12
	수급	28.69	39.76	55.5	38.19	38.88
기초생활 보장수급 여부	미수급	68.5	97.88	90.06	86.92	96.49
	수급	31.5	2.12	9.94	13.08	3.51
기초(노령) 연금수급 여부	미수급	76.01	85.69	69.11	76.74	85.01
	수급	23.99	14.31	30.89	23.26	14.99
기타정부 보조급여 수급여부	미수급	44.64	65.89	48.17	49.82	61.12
	수급	55.36	34.11	51.83	50.18	38.88
주거형태	자가	25.07	74.59	68.5	62.65	78.45
	기타	74.93	25.41	31.5	37.35	21.55
가구유형	독거가구	50.13	9.53	24.01	19.34	5.39
	부부가구	18.5	25.56	40.37	24.02	24.36
	동거가구	31.37	64.92	35.63	56.63	70.26

구분		1. 주거비 중심형	2. 관계비 중심형	3. 의료비 중심형	4. 식비 중심형	5. 교통비 중심형
거주지역	서울	26.27	17.29	15.6	18.19	11.71
	광역시	30.83	27.5	25.08	27.58	21.78
	기타지역	42.9	55.21	59.33	54.23	66.51
가구주 성별	남자	57.51	82.85	70.03	75.16	89.93
	여자	42.49	17.15	29.97	24.84	10.07
가구주 교육수준	전문대 이상	7.77	16.53	8.87	10.94	16.39
	고졸	31.64	41.88	25.23	33.21	42.86
	중졸이하	60.59	41.59	65.9	55.84	40.75
노령 여부	준노령	72.12	81.38	57.19	72.42	81.03
	노령	27.88	18.62	42.81	27.58	18.97
만성질환 여부	없음	31.1	40.8	14.68	35.21	43.56
	있음	68.9	59.2	85.32	64.79	56.44

제 3 절 패널 로지스틱 분석 결과

1. 소비빈곤에 대한 공적이전소득 수급액의 영향력 분석

공적이전소득 수급액 및 기타 통제요인들이 가구의 개별적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전에, 우선 각 공적이전소득 수급액이 가구의 전반적인 소비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비빈곤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패널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 11>과 같은데, 공적이전제도 중 기초(노령)연금 수급액만이 중·고령층 가구의 소비빈곤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가구에 비해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이 1% 증가한 가구일수록 소비빈곤일 가능성이 1.2배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기초(노령)연금이 소비빈곤층에게 적절히 지급되고 있음을 시사하면서도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만으로는 소비빈곤을 경감시키기는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다른 공적이전소득의 수혜액의 변동이 소비빈곤상태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회보험과 기초생활보장 등의 공적이전소득이 가구의 전반적인 욕구충족, 혹은 복지정도를 나타내는 소비빈곤과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기타 변수 중에서는 소비패턴, 소득빈곤여부, 가처분소득, 가구유형이 소비빈곤여부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가구주 성별과 교육수준, 만성질환여부 등 역시 소비빈곤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소비빈곤 영향요인 분석

변수		B(S.E)	Exp(B)
공적이전 수급여부	사회보험급여 수급액(ln)	-0.0259 (0.048)	0.974
	기초생활보장 수급액(ln)	0.0188 (0.0927)	1.019
	기초(노령)연금 수급액(ln)	0.1836*** (0.0645)	1.201
	기타 정부보조급여 수령액(ln)	-0.0755 (0.0465)	0.927
소비 패턴	소비패턴	0.2946*** (0.0391)	1.343
빈곤여부 변수	소득 비빈곤	-1.302*** (0.1269)	0.272
경제관련 변수	순자산(ln)	-0.00613 (0.0179)	0.994
	가처분소득 (ln)	-0.6752*** (0.1086)	0.509
	가구주 취업여부	0.2064 (0.1417)	1.229
가구관련 변수	주거형태 (전세·월세)	-0.0784 (0.1962)	0.925
	가구유형 (동거)	-0.7482*** (0.1124)	0.473
	거주지역 (기타지역)	-0.0738 (0.2965)	0.929
인구사회학적 변수	가구주 성별 (여)	1.3872* (0.7747)	4.004
	가구주 노령여부	0.052 (0.1498)	1.053
	가구주 교육수준 (중졸 이하)	-1.6176* (0.7143)	0.198
건강관련 변수	만성질환여부	-0.2425** (0.1204)	0.785

2. 소비패턴 별 영향요인 분석

각 소비유형에 속할 확률에 대한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고정효과 로지스틱 패널 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주거비 중심형

소속 여부의 경우, 소득 빈곤여부와 가구유형, 기타정부보조급여 수급액, 거주지역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빈곤가구보다 소득 비빈곤 가구가 주거비 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약 45% 낮으며, 독거가구보다 부부가구, 동거가구로 갈수록 주거비 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약 59%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광역시나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주거비 중심형에 속할 확률은 약 2배 증가한다. 또한 기타정부보조급여 수급액이 1% 증가할수록 주거비 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1.1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독거가구나 2인가구, 소득빈곤가구가 주거비 중심형일 확률이 높고, 공적이전 중에서는 기타정부보조급여 수급액이 높아질수록 주거비 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약간 높다고 할 수 있다.

관계비 중심형의 경우 소비 빈곤여부와 기타정부보조급여액, 가구주 노인여부, 가구유형, 거주지역, 소득빈곤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다. 우선 소비 비빈곤 가구가 소비 빈곤가구에 비해 관계비 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2배 가량 증가하며, 기타정부보조급여 수급액이 1% 증가할수록 관계비 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약 10% 낮아진다. 한편 가구주가 노인인 경우 관계비 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38% 감소하며, 독거가구에서 부부가구와 동거가구로 갈수록 이 소비패턴에 속할 확률이 1.22배 증가한다. 소득 비빈곤 가구는 관계비 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1.19배 크며, 거주지역이 서울에서 광역시,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관계비 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4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빈곤여부와 거주지역은 통계적 유의성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관계비 중심형에 대해 종합하면 중위소비 50% 이상이 가구와 기타정부보조급여를 많이 받지 않는 가구원이 많은 가구가 사회적 관계에 많은 지출을 하는 관계비 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의료비 중심형의 경우 만성질환여부와 소비 빈곤여부, 가구주 취업여부 및 기초연금 수급액, 가처분소득액, 소득 빈곤여부가 영향을 미쳤다. 우선 소비 비빈곤 가구는 소비빈곤 가구에 비해 의료비 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3배나 높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가구주가 취업을 하면 이 소비패

턴에 속할 확률이 1.9배 이상 높아졌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이 1% 증가할수록 의료비 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1.18배 정도 증가하였다. 가처분 소득이 1% 증가하면 해당 유형에 속할 확률이 1.33배 증가했으며, 소득비빈곤 가구는 소득빈곤 가구보다 의료비 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45% 더 낮았다. 결국 의료비 중심형은 만성 질환이 있으면서 어느 정도 직업과 소득이 있어 의료비에 지출할 능력이 있는 가구가 속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식비 중심형은 소비 빈곤 여부, 가구주 노인여부, 가구주 취업 여부, 기타정부보조급여수급액, 가처분소득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먼저 소비 비빈곤 가구가 소비 빈곤가구에 비해 식비 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0.84배 감소한다. 또한 가구주가 노인인 경우 식비 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1.48배 증가했으며, 가구주가 취업한 경우 해당 소비패턴에 속할 확률은 36% 감소했다. 가처분 소득이 1% 늘어날 때마다 식비 중심형에 속할 확률은 12% 감소했고, 기타정부보조급여 수급액이 1% 증가할 경우 이 유형에 속할 확률이 1.07배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가처분소득이 1% 증가할 경우 해당 군집에 속할 확률이 12% 감소했다. 종합해보았을 때, 직장을 잡지 못한 노인인 경우 소비가 위축되어 식비에만 주로 소비를 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통비 중심형의 경우 소비빈곤여부와 소득빈곤여부, 거주 지역, 가구유형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소비 빈곤에서 탈피하면 교통비 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약 6.17배 증가하며, 소득 빈곤에서 탈피하면 이 소비패턴에 속할 확률이 약 1.63배 증가한다 한편 거주지역을 서울에서 소도시나 지방으로 이전할수록 교통비 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약 2.37배 증가하였으며 1인 가구에서 부부가구, 동거가구로 갈수록 교통비 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약 1.35배 증가했다. 종합하면 소득과 소비 모두가 충분히 많은 경우와 도심이 아니라 지방에 거주해 교통비 지출이 불가피한 경우, 또한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교통비 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증가했다. 본 패널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중·고령층의 소비패턴에 미치는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인 기타 정부보조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경제적으로 좀 더 취약한 소비패턴에 속할 확률이 다소 높아진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다른 변수들 중에서는 소비빈곤여부, 소득빈곤여부와 가구유형 및 거주지역이 중·고령층 가구의 소비패턴을 결정하는 유의한 요인이었다.

<표 12> 주거비·의료비·관계비 중심형 영향요인 분석

변수	1. 주거비 중심형		2. 관계비 중심형		3. 의료비 중심형	
	B(S.E)	Exp(B)	B(S.E)	Exp(B)	B(S.E)	Exp(B)
소득 비빈곤	-0.5903*** (.1887)	0.554	0.1762* (.1018)	1.193	-0.4294** (.1768)	0.651
소비 비빈곤	0.2636 (.1635)	1.302	0.6943*** (.0941)	2.002	1.1061*** (.1415)	3.023
순자산 (ln)	-0.0235 (.0235)	0.977	-0.00666 (.0136)	0.993	-0.00809 (.0226)	0.992
가처분소득 (ln)	-0.1607 (.1133)	0.852	0.1175 (.0746)	1.125	0.2896** (.1163)	1.336
사회보험 수급액(ln)	0.0223 (.0672)	1.023	-0.0458 (.0325)	0.955	0.0304 (.0588)	1.031
기초생활보장 수급액(ln)	0.0565 (.1119)	1.058	0.0894 (.0975)	1.094	-0.136 (.1303)	0.873
기초(노령)연 급 수급액(ln)	-0.023 (.0964)	0.977	-0.0875 (.0574)	0.916	0.1665** (.0789)	1.181
기타정부보조 급여 수급액(ln)	0.1596** (.0685)	1.173	-0.1038*** (.0372)	0.901	-0.0697 (.0616)	0.933
주거형태 (전세·월세)	0.1707 (.2563)	1.186	-0.2188 (.1510)	0.803	-0.0939 (.2763)	0.91
가구유형 (동거)	-0.8811*** (.1611)	0.414	0.2017** (.0906)	1.224	-0.1508 (.1404)	0.86
거주지역 (기타지역)	0.6973** (.2941)	2.008	-0.395* (.2143)	0.674	0.1639 (.3619)	1.178
가구주 성별 (여)	-0.1668 (1.0122)	0.846	-0.6956 (.7570)	0.499	1.5379 (1.0164)	4.655
가구주 노인여부	0.0953 (.2306)	1.1	-0.4683*** (.1238)	0.626	-0.1443 (.1819)	0.866
가구주 교육수준 (중졸 이하)	0.2967 (.7739)	1.345	0.5262 (.5025)	1.693	-1.1427 (.9666)	0.319
가구주 취업여부	0.2457 (.1812)	1.278	0.0905 (.1144)	1.095	0.6602*** (.1669)	1.935
만성질환 여부	-0.1925 (.1712)	0.825	-0.0827 (.0843)	0.921	0.6482*** (.1708)	1.912

<표 13> 식비·교통비 중심형 영향요인 분석

변수	4. 식비 중심형		5. 교통비 중심형	
	B(S.E)	Exp(B)	B(S.E)	Exp(B)
소득 비빈곤	-0.0127 (.0998)	0.987	0.4866** (.2107)	1.627
소비 비빈곤	-1.3532*** (.0892)	0.258	1.8203*** (.2508)	6.174
순자산 (ln)	0.0102 (.0127)	1.01	0.0173 (.0266)	1.017
가처분소득 (ln)	-0.1249* (.0694)	0.883	-0.1124 (.1373)	0.894
사회보험 수급액(ln)	0.0355 (.0324)	1.036	-0.0104 (.0579)	0.99
기초생활보 장 수급액(ln)	-0.00269 (.0746)	0.997	0.0542 (.2127)	1.056
기초(노령) 연금 수급액(ln)	-0.0197 (.0518)	0.98	-0.0106 (.1169)	0.989
기타정부보 조급여 수급액(ln)	0.0696* (.0348)	1.072	0.0802 (.0674)	1.083
주거형태 (전세·월세)	0.1746 (.1437)	1.191	-0.3891 (.2938)	0.678
가구유형 (동거)	0.1375 (.0840)	1.147	0.2973* (.1765)	1.346
거주지역 (기타지역)	-0.232 (.1907)	0.793	0.8625** (.3804)	2.369
가구주 성별 (여)	0.1308 (.7415)	1.14	-9.9115 (381.8000)	0
가구주 노인여부	0.3946*** (.1169)	1.484	0.0766 (.2504)	1.08
가구주 교육수준 (중졸 이하)	-0.3554 (.5030)	0.701	-0.2376 (1.3025)	0.789
가구주 취업여부	-0.4475*** (.1063)	0.639	-0.0753 (.2554)	0.927
만성질환 여부	-0.0614 (.0842)	0.94	-0.0447 (.1567)	0.956

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 결과 종합

본 연구는 중·고령층가구를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맞춤형 복지정책의 구상을 위해 노인가구의 소비특성 및 공적이전 정책이 소비특성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의 5-12차 년도에 모두 응답한 1951년생~1945년생의 노령가구주와 1961년생~1955년생의 준노령가구주의 가구를 대상으로 소비패턴을 유형화하였으며, 경제 및 공적이전,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소비패턴의 영향요인에 대한 패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2016년 현재 만 65세 이상의 노령층과 이제 막 노령층에 진입하는 준노령층의 베이비붐 세대 간의 소비특성 차이를 도출할 수 있었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을 중심으로 적은 소득 안에서 주거비, 식비, 의료비 등 기본적인 지출에 큰 비중을 두는 소비특성을 가진 가구가 있는가 하면, 사회적 활동에 사용하는 비용 혹은 여가비용과 교통비에 지출을 많이 하는 안정적인 재정상태의 소비특성을 가진 가구도 존재했다.

이렇게 비슷한 특성을 가진 가구를 5개의 군집으로 묶어 주거비 중심형, 관계비 중심형, 의료비 중심형, 식비 중심형과 교통비 중심형으로 소비패턴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득과 소비수준, 월평균 가처분소득 등의 경제적 수준은 교통비 중심형이 가장 높았으며, 대체로 관계비 중심형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였고 식비 중심형과 의료비 중심형은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주거비 중심형이 가장 낮은 경제적 수준을 보였다. 주거비 중심형과 의료비 중심형의 높은 경제적 취약성은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이며(백학영, 2010; 이지영·김도성, 2015; 최옥금, 2015), 본 연구에서 재확인되었다.

또한 패널 로지스틱 분석 결과 기초연금을 제외한 공적이전은 중·고

령층의 소비빈곤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소비패턴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한편, 소비빈곤여부가 소비패턴에 큰 영향을 보임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소비 수준별로 세목별 소비비중의 특성이 변화하는데, 현재의 소득지원정책으로는 가구의 소비빈곤을 해소하기는 어려우며, 의료비와 주거비 등 생계에 필수적인 지출부담을 줄여 노인가구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비패턴에서 필수적 지출이 충족된 소비패턴으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정책제언과 한계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우선 현재 만 65세 이상 노년층이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 취약한 현실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보험제도의 낮은 성숙도 등으로 인해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 노인의 소비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등의 일률적인 소득보장 보다는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의 구체적 소비패턴을 분석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본 연구는 점차 성숙해가는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를 고려하여 기존 연구에서 시행하지 않은 종단적 분석방법을 통해 장기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영향요인의 양상을 분석할 수 있었으며, 노령층과 준노령층 가구의 소비 및 소득수준 등 경제적 능력 관련된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었다.

소비패턴 및 영향요인 분석에 따르면 노인인구의 소비특성은 유형별로 다양하며, 그 영향요인도 제각각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같은 소득보장제도를 포함한 정부의 공적이전은 주거비 중심형이나 식비 중심형, 의료비 중심형 같이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출 위주인 소비패턴에서 노인이 탈피하도록 하지 못한다는 시사점이 도출되며, 장애수당, 양육수당, 농어업정부보조금, 바우처

지원금, 근로장려세제, 급식비지원, 에너지감면, 통신비감면 등을 포함한 기타정부보조급여를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거비, 식비 중심형 소비패턴의 가구가 수급할 확률이 높다는 점은 사회보험과 소득보장제도와 대비되는 결과를 보인다. 이러한 소득보장제도의 한계는 선행연구들에서도 제기되었던 것이다(김정훈, 2018: 197; 백학영, 2010: 928; 정영숙, 2000). 또한 이는 소득보장제도가 사회의 빈곤율을 낮추는 효과성은 높지만 개별 가구들의 빈곤정도를 완화시키는 효율성은 낮다는 기존 연구결과와도 연결된다(장현주, 2010; 김환준, 2017).

지출액이 총 10조에 달해 노인복지지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초연금이 노인의 기본적인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의 생계·주거·의료급여 역시 이를 채우기는 부족하다(윤석명, 2013; 최옥금, 2011). 복지재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많은 수급대상에게 광범위하게 지급되는 소득보장정책보다는 지원이 필요한 노년층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를 고려하여 주거비, 의료비, 식비 등의 기본적인 생활비 항목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으로의 발전이 필요하며 선행연구들도 이를 지적하고 있다(김진훈, 2016: 923, 이지영·김도성, 2015: 398-399, 정영숙, 2000: 71-72). 특히 현재 노년가구는 준노령가구에 비해 경제적 수준이 열악하기 때문에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일정액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보다 기본적인 생활비 지출 부담이 높아 의복비와 통신비 등의 지출과 여가생활비 등의 지출을 미처 고려하지 못하는 소비패턴을 갖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대한 복지서비스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의 현실화, 차상위계층 대상 의료비 지원, 방문봉사 및 의료지원 서비스의 확대, 기초연금 차등지급(김정훈, 2018: 197, 윤석명, 2018: 49, 최옥금, 2011) 등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증가하는 노년층에 대한 복지수요에 대응하여 기초연금의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급여액을 증가시키는 방향보다는 현재로서는 주거비, 의료비, 식비 등의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의 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주거비 중심형의 경우 지방에 독거 혹은 부부가구가 많은 것을 고려해 공공임대주택의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과 같이 각 지역의 주

택을 정부가 매입하여 주거비 지출이 높은 저소득층 노인 가계에게 지급하는 정책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복지패널이 최초 표본 구성에 있어 (소득)빈곤 가구와 일반 가구를 동수 측정하였으므로 해당 패널을 사용한 본 연구의 표본에 편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공적이전 정책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분류를 통해 각각의 정책이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세밀한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소비패턴과 빈곤간의 관계 및 노인이 느끼는 삶의 질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고령인구의 빈곤을 퇴치하는 처방적 정책과 동시에 근로율은 높지만 빈곤한 고령인구가 높은 수준의 삶을 영위하면서 동시에 국가 경쟁력 향상의 밑바탕이 되도록 노년층의 일자리 지원 등 경제활동 능력 제고에 대한 정책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성호·최옥금. 2010. 기초노령연금의 탈빈곤 효과 및 계층별 소득보장 효과 분석. 한국사회정책, 17(2): 43~71.
- 김교성. 2010. 서울시 가구 빈곤의 원인에 관한 다층분석. 한국사회정책, 17(1): 215-240.
- 김교성·김성욱·이정면·노혜진. 2008. 빈곤의 측정과 규모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9: 297-320.
- 김기승·조용수. 2007. 연령세대별 빈곤 진출입(entry-exit) 결정요인. 응용경제, 9(3): 189-219.
- 김성욱·장동열. 201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선과 수급자 선정 기준 간 재산반영 여부에 따른 제도효과 모의분석: 기준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0(3): 267-291.
- 김시월·조향숙. 2015. 중·고령 1인가구의 소비패턴과 삶의 만족도. Financial Planning Review, 8(3): 89-118.
- 김재진 외. 2014.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김재호·정주연. 2012. 기초노령연금 도입에 따른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변화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1(1): 421-446.
- 김정훈. 2018. 노인복지서비스가 노후 삶의 질에 미친 영향 분석: 한

- 국복지패널의 패널 서열형 프로빗 모형 추정. 한국정책학회보, 27(3): 181-201.
- 김지훈·강길선. 2017.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질에 미치는 중단적 요인: 베이비붐 세대와 이전 및 이후세대간 비교분석. 한국가족복지학, 22(4): 605-626.
- 김진식·최영자·양승일. 2016. 복지레짐의 진화론적 패러다임 비교에 관한 연구: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20(4): 209-232.
- 김진훈. 2016. 고령자 가구의 소비특성 및 소비패턴 결정요인. 한국노년학, 36(3): 905-926.
- 김진훈·고보선. 2016. 노인가구 소비유형별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 노인복지연구, 71(4): 477-502.
- 김환준. 2017. 사회보장급여의 빈곤완화효과 분석. 사회복지연구, 48(3): 5-28.
- 남수정. 2014. 노년기 가구의 빈곤이동. 소비자학연구, 25(6): 115-131.
- 문진영. 2015. 빈곤선 측정방식에 대한 비교 연구. 비판사회정책, 46: 202-236.
- 박능후. 2004. 빈곤율 추정의 쟁점과 대안.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4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55-266.
- 박서영·홍송이. 2017. 은퇴 베이비부머의 소비패턴과 우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37(2): 349-368.

- 박상우·김성환. 2007. 경제위기 이후 빈곤의 특성과 결정요인. 경제연구, 25(3): 177-196.
- 박찬용·강석훈·김태완. 2002. 『소득분배와 빈곤동향 및 변화요인분석』.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배성우·손지아·박순미. 2008. 빈곤노인가구의 특성과 빈곤탈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 42: 291-318.
- 백학영. 2010. 빈곤지위와 가구유형에 따른 노인가구의 소비특성 차이 분석. 한국노년학, 30(3): 911-931.
- 보건복지부. 2014. 기초연금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17.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성영애·양세정. 1997. 논문편: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소비지출구조 및 관련요인의 비교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5(5): 103-117.
- 신복기·이성진. 2016. 은퇴이후 주관적 경제적 빈곤 발생기간의 영향 요인. 노인복지연구, 71(4): 61-89.
- 신화연. 2017.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험 장기재정전망 (II)』.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윤경. 2003. 노인부부가계와 노인독인가계의 소비패턴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5): 1-12.
- 윤석명. 2013. 노인빈곤 및 소득분포 실태와 소득지원 방향. 보건복지포럼 206: 7-17.

- 윤석명. 2018. 노인복지 예산의 현황과 과제. 노인복지포럼, 256: 37-50.
- 윤찬영. 1996. 노령수당의 위법성에 관한 고찰.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pp 194-201.
- 이상봉. 2018. 중·고령자의 빈곤 특성과 사회인구학적 결정요인. 사회과학연구, 25(1): 79-97.
- 이승신·김기욱·김경자·심영·정순희. 1996. 『가계경제학』. 서울: 학지사.
- 이순아. 2015. 한국사회 가구빈곤의 결정요인에 관한 다층분석. 한국사회학, 49(1): 139-177.
- 이용하·김원섭. 2013. 인수위 기초연금 도입(안)에 대한 평가와 전망. 사회보장연구, 29(2): 1-25.
- 이정화·문상호. 2014. 기초연금이 고령자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 - 성향점수매칭(PSM) 이중차이(DID)를 활용한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3(3): 411-440.
- 이지영·김도성. 2015. 베이비붐 세대 가계의 소비지출특성과 패턴에 관한 연구: 노인가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69: 379-403.
- 이채정·권혁주. 2016. 기초연금의 정책효과 분석 - 노인의 생활비 지출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8(3): 365-388.
- 임완섭. 2015. 빈곤 노인가구의 유형별 소득 및 지출 특성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26: 90-103.

- 임채홍·현승현·김수용. 2011. 절대적·상대적 빈곤수준의 결정요인 및 격차 비교분석: 2005-2007년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5(4): 77-109.
- 장현주. 20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감소 효과. 한국정책학회보, 19(4): 299-325.
- 장현주. 2013. 기초노령연금의 노인빈곤 감소효과: LIS 소득원천별 노인빈곤 비교. 현대사회와 행정 23(2): 121-146.
- 장현주. 2015. 기초연금의 재원부담방식에 관한 연구: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국고부담률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8(4): 417-436.
- 정영숙. 2000. 노인가계의 소비패턴과 복지정책적 함의. 소비자학연구, 11(1): 59-74.
- 정운영·정세은. 2010. 저소득 노인가계와 고소득 노인가계의 소비지출 구조 및 결정요인의 비교. 사회보장연구, 26(4): 21-48.
- 조성한. 2002. 공식적 빈곤선 계측에 대한 소고. 한국공공관리학보, 16(2): 157-180.
- 최성재. 2014.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고령화사회: 선진국의 경험과 한국의 정책방향』.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최옥금. 2011. 노인 가구의 소비지출 유형화 및 영향요인 분석. 노인 복지연구, 51: 277-296.
- 정경희 외. 2007.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경로연금 개편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인욱·이태진. 2018. 중고령 은퇴가구의 소득구성과 의료비 지출의 관계분석. 보건사회연구, 38(2): 227-256.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알아보기.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2&ccfNo=3&cciNo=2&cnpClsNo=3> (검색일: 2019.05.08.).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알아보기.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2&ccfNo=3&cciNo=2&cnpClsNo=2> (검색일: 2019.05.08.).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발표!.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47381 (검색일: 2019.05.08.).

통계청. 2017. 2017고령자통계.

통계청. KOSIS 100대 지표. http://kosis.kr/conts/nsportalStats/nsportalStats_0102Body.jsp?menuId=10&NUM=1014 (검색일: 2019.05.08.).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http://green.kostat.go.kr/blife/result-idx.do?oaYear=2011&idctId=201304858> (검색일: 2019.04.23.).

Burtless, G., & T. Smeeding. 2001. The Level, Trend, and Composition of Poverty. Danzinger, S. H., & R. H. Haveman(eds.) Understanding Poverty. Cambridge, Havard Univ. Press: 27-68.

Dandekar, V. M. 1981. Measurement of Poverty. Bombay: Orient Longman Limited.

- Iceland, J. 2005. Measuring Poverty: Theoretical and Empirical Considerations. *Measurement*, 3(4): 199–235.
- Jackson, T. & Marks, N. 1999. Consumption, sustainable welfare and human needs—with reference to UK expenditure patterns between 1954 and 1994. *Ecological Economics*, 28(3): 421–441.
- Meyer, B. D. & Sullivan, J. X. 2007. Consumption and Income Poverty for those 65 and over. The 9th Annual Joint Conference Research Consortium “Challenges and Solutions for Retirement security” August 9–10, 2007 in Washington.
- National Research Council. 1995. *Measuring Poverty : A New Approach*. Washington. D.C. : National Academy Press.
- OECD. 2017. *Pensions at a glance 2017*, OECD.
- Orshansky, M. 1969. How Poverty is Measured. *Monthly Labor Review*, 92: 37–41.
- Ringen, S. 1988. Direct and Indirect Measures of Poverty. *Journal of Social Policy*, 17(3): 351–365.
- Selsnick, D. T. 2001. *Consumption and Social Welfare: Living Standards and Their Distribution in the United Stat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ownsend, P. 1962. Meaning of Poverty,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2): 210–227.

World Bank. 2002. Poverty Measurement and Analysis. A sourcebook for Poverty Reduction Strategies vol. 1.

Abstract

Panel Study on the Effects of the Amounts of Public Income Security on Consumption Patterns of Semi-aged and Older Households of Korea

Youngseop, Jo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Master of Public Policy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suggest an effective customized welfare policy to alleviate the consumption poverty of older households by comparing the consumption characteristics of older and semi-aged households and analyzing how the public income security amount affects the consumption patterns reflecting the specific needs and welfare levels of semi-aged and older households.

To that end, based on data from the 5th to 12th years of the Korea Welfare Panel, households with a household age of 65–71 were designated as older households, and those with an age of 55–61 were designated as semi-aged households. For these households, a K-means cluster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expenditure ratio of consumption items and divided into five consumption patterns, and a logistic panel analysis was performed to analyze the impact of consumption poverty, public income security system supply and other factors on consumption patterns.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income and consumption poverty rate of the older households, in contrast to those of the semi-aged households, has increased, and the ratio of the elderly households receiving benefits from the public transfer system, such as the basic pension and other government subsidy benefits has also increased. On the other hand, the percentage of workers in older household has continued to decline. Older households' having chronic disease ratio and ratio of women were higher than those of semi-aged household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consumption patterns of semi-aged and older households, they were divided into Housing cost-oriented, Relationship cost-oriented, Medical cost-oriented, Food cost-oriented, and Transportation cost-oriented. Housing cost-oriented showed the most vulnerability in various economic indicators, including income poverty rate and employment status, followed by Medical cost-oriented and Food cost-oriented. Relationship cost-oriented and Transportation cost-oriented were relatively high in terms of income and consumption. Housing cost-oriented types had a higher rate of single-person household than 50%, with the highest proportion of women in the household. In addition, the rate of social insurance coverage was relatively low, but the ratio of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nd other government subsidies was the highest. Meanwhile, the Medical cost-oriented showed the highest rate of social insurance beneficiary.

As a result of panel analysis on the impact factors of consumption patterns, it was found that poor consumption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onsumption patterns of semi-aged and older people, confirming the link between poverty status and consumption patterns.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the income security policy, especially the Basic pension and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did not affect the consumption pattern. This means that the current income security policy targeting older people does not respond much to the specific needs of older people.

The study found that older people over 64 were more economically vulnerable than their baby boomers in the same age and that current public income securities have limitations in reducing poverty for older people. On the other hand, the analysis of consumption patterns of older people identified the characteristics of relatively poor people with large expenditure related to basic living such as housing, medical expenses, and food costs. In sum, it would be necessary to focus on the development of tailored policies that take into account individual consumption patterns such as housing support for the poor and medical aid, rather than the expansion of income security policies such as Basic pensions, to alleviate poverty among the elderly.

Through a longitudinal analysis, the consumption characteristics of older households compared to semi-aged households were analyzed, and the degree of effects on the fulfillment level of respective needs of households, including Korea's gradually maturing public income security system, was identified. However, it is difficult to apply these findings to the overall elderly population as the Korea Welfare Panel

was over-collected for low-income people, and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the effectiveness of individual public transfer policies in detail. It also calls for an analysis of the individual necessary customized policies currently in place, such as job support for older people in the future.

Keywords : Older and semi-aged people, Consumption Poverty, Income Poverty, Public Income Security, Basic Pension,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Korea Welfare Panel Study

Student Number : 2017-23334